

전환 : 모두를 위한 정치



일시 2020년 9월 4일 (금) 13:20~17:50

장소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
(양재역 5번 출구 금정빌딩 6층)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제 6회 대화의 집

전환 : 모두를 위한 정치

2020.09.04.

전환

모두를 위한 정치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13:20-17:50
- 장소 :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 (양재역 5번 출구 금정빌딩 6층)
- 주최 : 재단법인 숲과나눔
- 주관 :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인사말

포럼 생명자유공동체가 ‘전환: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9월 4일, 여섯 번째 대화마당을 엽니다. 코로나 19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상상하고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랫동안 과학사회학과 이론사회학을 연구해 온 김환석 명예교수가 ‘탈인간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중심의 접근을 넘어 사회과학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이론과 방법론에서 대해 기초강연을 합니다. 이어서 한상진 교수는 ‘먹거리 정의(justice)’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사회적 전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새롬 연구원은 커먼즈 담론을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김수진 박사는 정치 과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감정을 주제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정동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완 박사는 환경, 생명, 공동체, 동물 운동가들의 구술 생애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전환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어떤 전환, 어떤 정치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지’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제6회 대화의 편

전환: 모두를 위한 정치

2020.9.4금 13:20~17:50

(재)숲과나눔 강당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일정	발표 및 토론
13:00~13:20	등록
13:20~13:30	사회: 황진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3:30 - 14:50	기조강연: 탈인간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 김환석(국민대학교 명예교수)
14:50 - 15:00	휴식
15:00~15:40	• 먹거리 시스템의 생태사회적 전환을 위한 먹거리 정의의 접근 틀 - 한상진(울산대학교 교수) • 토론: 장우주(여성학 박사)
15:40~16:20	• 커먼즈의 전환 정치 - 안새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토론: 정영신(가톨릭대학교 교수)
16:20~16:30	휴식
16:30~17:10	• 전환과 감정: 사용후핵연료의 정동정치 - 김수진(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 토론: 박순열(도시재생연구소 소장)
17:10~17:50	• 삶의 전환: 생태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 홍덕화(충북대학교 교수)

문의 안새롬 me2th@snu.ac.kr

주최



재단법인 숲과나눔

주관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CONTENTS

- [기조강연] 탈인간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신유물론 패러다임' 07
김환석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먹거리 시스템의 생태사회적 전환을 향한
먹거리 정의 접근 19
한상진 (울산대학교 교수)
- 커먼즈의 전환 정치 33
안새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전환과 감정: 사용후핵연료의 정동정치 49
김수진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 삶의 전환: 생태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 65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탈인간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신유물론 패러다임'

김환석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탈인간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신유물론 패러다임’

김 환 석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사회과학, 예술, 인문학 분야의 이론 및 실천 면에서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 또는 ‘존재론적 전환(ontological turn)’을 공통점으로 갖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에 붙여진 이름이다.¹⁾ 이러한 전환은 세계와 그 안의 모든(즉 사회적 및 자연적인) 것들이 지닌 물질성(materiality)을 강조한다.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텍스트와 언어 그리고 ‘담론’에 초점을 맞췄던 포스트구조주의와 구별되며, 사회적 구성보다는 사회물질적 생산에 초점을 둔다. 신유물론 접근들에서 고려되는 물질성들에는 인간 신체, 기타의 생물 유기체들, 물질적 사물들, 공간과 장소 그리고 이들이 내포하는 자연환경 및 건조된 환경, 그리고 중력과 시간을 포함하는 물질적 힘들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추상적 개념, 인간적 구성물과 부대현상들(상상력, 기억, 사유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그 자체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소들은 물질적 효과를 생산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서구(영미권) 사회과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1950~60년대는 실증주의와 기능주의가 지배적이었지만(프랑스는 구조주의가 지배적), 이른바 ‘68혁명’의 영향으로 197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80~9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나 포스트구조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대두함으로써 언어, 의미, 담론,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현실을 파악하는 ‘언어적(=문화적) 전환’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사회현실에서 물질성이 지닌 중요한 역할을 간과한다는 자각이 대두하면서, 대략 2000년대부터 자연, 공간, 인공물, 과학기술 등 비인간 사물들을 사회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물질적 전환’ 또는 ‘신유물론 패러다임’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지배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²⁾

신유물론 패러다임의 ‘물질적 전환’은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퀴어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은 가부장제, 합리주의, 과학과 근대주의를 비판하거나 또는 사회정의와 다원성을 위한 투쟁을 뒷받침하는 데 경제결정론과 구조주의적 결정론은 부적합하다고 거부하였다. 하지만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포스트구조주의에서 텍스트와 언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1) 김환석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112 (2016) 208면.
2) 신유물론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대표적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Diana Coole and Samantha Frost (eds.),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Rick Dolphijn and Iris van der Tuin,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Ann Arbor, MI: Open Humanities Press, 2012); Richard Grusin (ed.), *The Nonhuman Tur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Martin Holbraad and Morten Axel Pedersen, *The Ontological Turn: An Anthropological Expo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Ulrike Tikvah Klissmann and Joost van Loon (eds.), *Discussing New Materialism: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Materialities*. Wiesbaden: Springer VS, 2019).



것을 비판하는 반작용이다. 또한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역사적 유물론을 탈피하는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는데, 행위/구조의 이원론과 사회관계의 경제적 토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강조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물질성과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뒷받침하고, 혼잡하고 이질적이며 창발적인 세계 안에서 권력과 저항을 새롭게 모델화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³⁾ 이렇게 물질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이론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종종 근본적 역할을 해왔던 수많은 이분법들을 횡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분법들에는 자연세계와 사회세계,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 정신과 물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또한 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실재론과 구성주의 사이의 인식론적 논쟁을 가로지르고, 사회세계의 ‘재현’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의문을 던지며, 자료수집과 분석 및 결과보고의 방법들을 재평가 및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유물론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과 의의를 지니며, 이에 따라 그것이 사회과학 연구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연구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존 사회과학 패러다임들과의 비교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유물론이 지닌 특징과 의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현재의 사회과학에서 유력한 이론적 패러다임들로서 서로 각축을 벌이며 공존하고 있는 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비판적 실재론과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그 비교를 요약한 표이다.

	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비판적 실재론	신유물론
핵심개념	관찰	의미	실재	물질
존재론	경험적 실재	불가지론	심층적 실재	다중적 실재
인식론	경험주의 (자연주의)	해석주의 (인식론적 상대주의)	비판적 자연주의	존재-인식론
선구적 사회학자	Comte Durkheim Merton	Weber Schutz Berger & Luckmann	Marx Archer Bourdieu	Tarde Simmel Latour

우선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19세기 중반에 콩트가 처음 제시하였고 이를 19세기 말에 뒤르켐

3) Rosi Braidotti, *Nomadic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137면.

이 과학적 사회학으로 체계화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 머튼 등에 의해서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특히 양적 방법)의 지배적 접근이 되었다. 실증주의는 존재론의 측면에서 실재들을 규모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즉 개인은 미시적 차원의 실재로 보는 반면에 사회는 훨씬 거시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재로 간주한다. 인간만을 행위자로 간주하며, 비인간의 영역인 자연과 인간의 영역인 문화는 뚜렷이 구분된다고 본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과 사회 전체는 각각 고유의 속성과 법칙이 있으며 이를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밝혀내는 것이 사회과학의 목적이라고 본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은 20세기 후반에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대두한 현상학적 사회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사회과학의 목적을 개인들의 사회적 행위가 지닌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있다고 본 베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방법론과 해석적 사회학(주로 질적 방법)으로 발전시킨 학자가 슈츠였고, 그의 제자인 버거와 루크만이 1967년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란 책을 통해 사회구성주의를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구성주의는 1970년대 중반에 과학사회학 분야에서 머튼의 접근을 비판하는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이란 형태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 사회구성주의의 주된 관심은 인식론이었기 때문에 존재론 즉 ‘실재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에 가까웠고, 그것보다 사회생활에 중요한 것은 실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였다. 인식의 주체인 인간만이 행위자라 보았고, 자연과 문화는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실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개인 각자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체론이 아닌 관계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비판적 실재론은 실증주의와 구성주의 모두를 비판하며 극복하려고 나타난 패러다임이다. 1970년대 후반에 영국의 과학철학자 로이 바스카가 제창했지만 이를 사회학의 유력한 접근으로 성장시킨 학자는 마가렛 아처이다. 그런데 비판적 실재론은 사실상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의 철학으로 정교화한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 뿌리를 마르크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르디외의 이론 역시 이들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 패러다임에 속하는 학자로 분류할 수 있다. 비판적 실재론은 인식론보다 존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실재는 표면의 경험적 현상이 아니라 심층의 구조(또는 메카니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재를 경험적 현상과 혼동하는 실증주의와 더불어, 구조를 무시한 채 인식론적 상대성만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모두를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도 인간만이 행위자라고 보는 인간중심적 이원론의 성격을 지니며, 심층의 구조는 예컨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로부터 출현하는 계급구조처럼 관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이상과 같은 세 패러다임들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다. 존재론의 면에서 그것은 실재들이 미시/거시와 같은 위계적 구분이나 표면/심층 같은 층화적 구분이 된다고 보지 않고, 모든 실재들은 세계 속에서 동일한 내재성의 평면 위에 존재하며 역동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해간다고 본다.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도 행위성을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문화와 자연도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보는 탈인간중심적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자신이 맺는 관계에 따라 속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존재 전체로 확대된 관계론의 입장에서 서 있다. 신유물론의 기초를 본격적으로 세운 것은 1980년대에 들뢰즈와 라투르 등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학에서 그 맹아를 제공한 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활동한 타르드와 짐멜로 소급될 수 있다고 신유물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3. 신유물론의 핵심적 측면들

신유물론에서는 세계와 역사가 물리적인 것과 생물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에 걸치는 다양한 물질적 힘들에 의해 생산된다고 간주한다.⁴⁾ 신유물론 접근들에서 다루어지는 물질성은 다원적이고, 개방적이며, 복잡하고, 불균등하며, 우연적이다. 또 그러한 물질성은 자연세계와 사회세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일부 신유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부동의 수동적 물질이 아니라 생기성과 활기가 부여되어 있다.⁵⁾ 이러한 신유물론은 내재성의 존재론으로 묘사되어 왔다. 즉 신, 운명, 진화, 생명력, 메카니즘, 체계 또는 구조와 같은 토대적 또는 초월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유물론의 핵심적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물질의 다원적 잠재성: 어셈블리지(assemblage)

인간 신체, 사물, 조직과 같은 실체들은 본질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그것의 맥락에 달려 있다. 한 맥락에서 나는 강사이고, 다른 맥락에서는 정원사이며, 또 다른 맥락에서는 남자 친구이다. 나의 역량은 내가 상호작용하거나 결집(assemble)하는 관계에 따라 창발되는 것이다.

신유물론의 일원론적 사회세계에서는 관계적 실체들(신체, 사물, 조직, 사회집합체)이 서로 감응을 주고 받는 그들의 역량 때문에 결집한다. 모든 사건 또는 상호작용은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어셈블리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생기적 유물론자인 베넷은 어셈블리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⁶⁾

“첫째, 어셈블리지는 임의적 집단화로서, 그 기원이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집합체지만 그 우연적 지위가 그것의 효능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즉 효능은 매우 강력할 수 있음). 둘째, 어셈블리지는 살아있고 약동하는 집단화로서 그 정합성은 어셈블리지를 능가하고 혼란시키는 에너지 및 반문화와 공존함. 셋째, 어셈블리지는 불균등한 지형을 지닌 그물망으로서, 행위소들의 궤적들이 서로 교차하는 어떤 지점들은 다른 지점들에 비해 교통이 혼잡하며 따라서 권력은 어셈블리지를 가로질러 평등하게 분포되지 않음. 넷째, 어셈블리지는 중심 권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음. 어떤 한 구성원도 그 어셈블리지의 활동 결과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지 않음. 다섯째, 어셈블리지는 많은 유형의 행위소들(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식물 및 광물, 자연과 문화 및 기술 등)로 구성됨.”

이러한 어셈블리지에는 자연세계와 사회세계의 경계를 가로질러 형성되는 다양한 결집체들이 포함된다. 데란다는 파슨스의 기능주의부터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을 폭넓게 형성해왔던 사회의 ‘유기체’ 모델을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사회철학을 이 어셈블리지 개념을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realism and social constructivism without contradiction,” ed. Lynn Hankinson Nelson and Jack Nelson, *Feminism,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Dordrecht: Kluwer, 1996) 161~194면;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2013) 3면.
5) 신유물론 중에서 특히 물질의 생기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는 제인 베넷의 다음 책에 제시된 ‘생기적 유물론(Vital Materialism)’이다. Jane Bennett, *Vibrant Matt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0).
6) Jane Bennett, “The agency of assemblages and the North American blackout,” *Public Culture* 17.3 (2005) 445면.

적용하여 제시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⁷⁾ 즉 그는 사회가 ‘내부성의 관계(relations of interiority)’에 기초한 유기체가 아니라, ‘외부성의 관계(relations of exteriority)’에 기초한 어셈블리지가 더 적실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 물질의 활기: 감응(affect)

신유물론에서는 모든 물질이 감응을 주고 감응을 받는(affect/be affected) 역량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물질은 활기가 있고, 일부 학자들은 물질이 생기가 있다고 말한다.⁸⁾ 물질은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방식으로 결집한다. 이는 우리 관심의 초점을 인간 행위성으로부터 모든 물질의 감응성(affectivity)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인간들만의 역량을 뜻했던 ‘행위성’ 대신에, 신유물론은 한 어셈블리지 안의 모든 상이한 물질성들이 다른 어셈블리지에 감응을 주거나 감응을 받는 역량을 지닌다고 간주한다.⁹⁾ 따라서 인간들은 이러한 존재론에서 더 이상 원동력이 아닌 것이다. 한 어셈블리지 안의 감응들이 나타내는 집합적 ‘경제’¹⁰⁾는 그 어셈블리지(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 및 비인간 관계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행위하고 상호작용하거나 느끼는 역량들은 관계의 내재적이거나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창발된다.¹¹⁾ 어떤 관계(그것이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생물이든 비생물이든)가 지닌 역량의 폭은 그것이 행하는 감응적 상호작용들의 풍부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3) 평평한 존재론: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신유물론의 존재론은 ‘평평한’ 또는 ‘일원론적’(‘이원론적’이 아니라) 존재론이라고 묘사되어 왔다. ‘자연’과 ‘문화’ 영역 사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 구조 대 행위, 이성 대 감정,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정신과 물질 사이에 차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¹²⁾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평평한 존재론은 보편주의로의 움직임 또는 사회적인 것 또는 주체성에 대한 단일한 관점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대체하는 이분법들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다중성과 다양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평평한 존재론은 일상생활의 활동 및 상호작용의 표면을 넘어(또는 그 심층에) 존재하는 위계, 체계 또는 구조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돌려 일상생활 자체로 재초점화하도록 만든다. 신유물론의 존재론에서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심층의 어떤 구조, 체계 또는 메카니즘도 없다. 대신에 존재하는 것은 ‘사건들(events)’뿐이다. 즉 세계와 인간 역사를 함께 생산하는 자연과 문화의 물질적 효과들을 포괄하는 사건들의 끝없는 폭포만이 있을 뿐이다.

사건들/어셈블리지들의 관계적 성격과 그들의 물리적, 생물적, 표현적 구성을 탐구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들과 문화들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또는 체계적 ‘설명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7) Manuel DeLanda, *A New Philosophy of Society* (London: Continuum, 2006).
8) Bennett, 앞의 책.
9) Gilles Deleuze, *Spinoza: Practical Philosophy* (San Francisco: City Lights, 1988) 101면.
10) Patricia Ticineto Clough, “Future matters: technoscience, global politics, and cultural criticism,” *Social Text* 22.3 (2004) 15면.
11) Karen Barad, “(Re)configuring space, time and matter,” ed. Marianne DeKoven, *Feminist Locatio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96면.
12) Iris van der Tuin and Rick Dolphijn, “The transversality of new materialism,” *Women: A Cultural Review*, 21.2 (2010) 153~171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생산하는 지속성, 유동성, '생성들'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의 수단이 된다.¹³⁾ 이것은 사회과학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데, 즉 우리가 사건들 안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상호작용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4. 신유물론 내의 주요 접근들

신유물론 패러다임에는 감응이론부터 비재현이론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넓은 폭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는 포스트휴먼적이고 탈인간중심적이며¹⁴⁾, 물질적으로 배태되고 체현되어 있으며¹⁵⁾, 관계적이고 우연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신유물론패러다임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개별 이론 4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브뤼노 라투르: 행위자-연결망이론

라투르가 대표적 학자인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 약칭 ANT)은 일부 사회과학자들에게 이미 친숙할 수 있다.¹⁶⁾ 그것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소들'을 포함하는 일시적인 관계적 연결망 또는 어셈블리지에 행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¹⁷⁾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사회생활은 "그 안에서 사회적 것, 기술적인 것, 개념적인 것, 텍스트적인 것이 함께 조립되는"¹⁸⁾ 일종의 이질적 공학이라고 주장한다. ANT는 단지 자연/문화의 이항대립뿐 아니라 사회학에 매우 중요한 행위/구조의 이원론도 붕괴시킨다. 라투르는 사회적 과정들을 심층 또는 저변의 구조 또는 메카니즘에 의해 설명하는 비판적 실재론과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접근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라투르에 의하면, 기존 사회학에서 설명요인으로 등장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그 자체가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들이다.¹⁹⁾

2) 들뢰즈와 과타리: 생성의 미시물리학

들뢰즈와 과타리의 유물론은 인간 신체와 모든 다른 물질적, 사회적, 추상적 실체들을 관계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실체들은 감응을 주거나 감응을 받는 그들의 역량을 통해 다른 유사하게 우연적이고 단명하는 신체들, 사물들, 관념들과 더불어 '어셈블리지들' 속에 함께 끌려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런 존재론적 지위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⁰⁾ 그러한 역량들-스피노자를 따라서 들뢰즈는 이를 단순히 '감응'이라고 부름-은 물리적일 수도, 생물적일 수도, 심

13)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30면.
14) Braidotti, 2013책 86면.
15) Braidotti, 2011책 128면.
16) ANT와 라투르에 대한 국내 소개문헌은 다음을 참고할 것. 김환석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제83호 (2011) 11~46면; 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옌센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황장진 역, 사월의책, 2017).
17) Latour 앞의 책 54면.
18) John Law,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1992) 381면.
19) Latour 앞의 책 130~131면.
20)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London: Athlone, 1988) 88면.

리적일 수도, 사회적일 수도, 정치적일 수도, 또는 감정적일 수도 있다. 어떤 감응은 어떤 신체 또는 기타 관계의 역량을 특수화 또는 '영토화'하는 반면에, 다른 감응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 또는 '탈영토화'한다. 어셈블리지들 내에서 감응의 흐름은 상호작용 중에 역량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명, 사회, 역사가 펼쳐지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3) 캐런 바라드: 유물론적 존재-인식론

페미니스트인 캐런 바라드의 유물론은 그 영감을 양자역학(특히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이론)에서 끌어왔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외견상 독립적인 입자들도 얽혀 있으며 관찰 행위가 관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상은 절대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맥락-특수적이며, 실재의 순수한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란 없다.²¹⁾ 문화와 자연은 차별적으로 특권화될 수 없고, 바라드가 주장하듯이 "구성되었다는 것은 물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²²⁾ 양자역학은 '물질적-문화적'인 과학적 실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이는 독립적 관찰자와 독립적 관찰대상 간의 구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물질, 언어와 세계 사이의 운동을 통해 지식과 존재가 만나는 '중간'에서.. 경계를 탐구하고 재규정하는"²³⁾ 실천이다.

4)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과 포스트-인문학

브라이도티의 관심은 생명을 지니고 살아있는 신체의 물질성에 있고, 신체와 주체성에 대한 체현되고 배태된, 페미니스트적이고 유물론적인, 유목적이고 포스트휴먼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있다.²⁴⁾ 그녀의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론과 들뢰즈-과타리의 '유목적'로부터 절충적으로 끌어온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그녀의 개념화를 인간중심적 인문학을 계승하는 '포스트-인문학'을 위한 철학적 토대로 사용하여 왔다. 그녀에 의하면, 포스트-인문학의 대상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²⁵⁾,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의 변화와 생성의 과정들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생태학(하나가 다른 하나와 구별되거나 특권화되지 않는)이다.

5. 신유물론은 사회과학에 무엇을 제공하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신유물론 패러다임은 사회과학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론적 및 실천적 가능성들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신유물론은 자연과 문화 사이의 분리 자체를 의문시하면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거부한다.²⁶⁾ 대신에 신유물론은 세계의 생산과 그 안의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을 매우 다양한 힘들(물리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생물적 과정과 사회적 대면 및 감정적 반작용까지)에 연결시킨다. 자연과 문화, 정신과 물질을 한 단일한 영역으로 끌어옴으로써, 신유물론은 유물론적 분석의 폭을 급진적으로 확대시킨다. 경험적 또는 개인적이라고 흔히 간주되어

21) Barad 앞의 글 170면.
22) 같은 글 181면.
23) 같은 글 185면.
24) Braidotti, 2013책 51면.
25) 같은 책 169면.
26) Latour, 앞의 책 13면.



은 이슈들-예컨대 창의성과 섹슈얼리티-도 역시 물질적으로 연구될 수 있고, 사유, 추상적 개념, 기억, 욕망과 느낌 또한 사회적 생산에 물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²⁷⁾

둘째, 신유물론은 물질세계와 그 내용을 고정되고 안정된 실체들로 보지 않고, 행위와 사건들을 둘러싸고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창발되는, “습관적이고 비습관적인 연결들의 일종의 카오스적 네트워크 속에서, 항상 유동적이고 항상 상이한 방식으로 재결집하는”²⁸⁾ 관계적이고 불균등한 실체들로 간주한다. 비판적 실재론자들은 세계가 위계적이고 층화된 구조들, 사물들, 본질들로 이루어진 것이라 상정해온 반면에, 들뢰즈와 같은 신유물론자들은 차이, 이질성, 창발에 기초한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세계를 상정한다.

셋째, 신유물론은 인간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는 물질의 행위성을 인정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응을 주고 감응을 받는 역량”²⁹⁾이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양상이다. 이것은 세계가 안정된 구조나 체계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상호작용적이고 생산적인 사건들/어셈블리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창발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확립하게 해준다.

넷째, 신유물론은 (i)권력과 사회구조에 대한 하향식, 결정론적 이론과 (ii)포스트구조주의 및 사회구성주의에서 강조되었던 텍스트성, 담론 및 사유체계에 대한 초점 두 가지 모두를 돌파할 수단을 제공한다. 물질적 전환은 삶과 투쟁의 물질성에 재몰두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단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게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신유물론에서는 존재론(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종류에 대한 관심)을 인식론(그러한 사물들을 어떻게 관찰자가 알 수 있는가를 다루는)보다 강조한다. 존재론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실재론자(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와 관념론자(세계는 인간 구성의 산물이라고 간주하는) 사이의 해소불가능한 논쟁을 관통하고, 물질이 무엇이나와 물질이 무얼 행하느냐에 대한 사회과학적 가정들에 도전한다. 이것은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심대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6. 신유물론의 연구방법론

신유물론 패러다임의 상이한 접근들은 연구방법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해준다. 우선 들뢰즈와 과타리는 주류, 다수 또는 ‘로열’ 과학연구 옆에서 나란히 전개되는 ‘소수과학(minor science)’을 옹호한다.³⁰⁾ ‘소수과학’의 관점은 연구사건들을 충실히 ‘재생산’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부터 물러서서, 사건의 흐름을 그것이 펼쳐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관심을 둔다. 어떤 강과 그 내용을 강둑의 고정된 지점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대신에, 소수과학은 배를 타고서 소수과학이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하는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들뢰즈와 과타리는 제안한다.³¹⁾

인문지리학의 비재현이론은 이런 관점을 이용하여 지식생산의 전통적인 재현적 양식들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감응적인 관여 또는 ‘목적’을 선호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27) DeLanda, 앞의 책 5면.

28) Annie Potts, “Deleuze on Viagra (Or, what can a Viagra-body do?),” *Body & Society* 10.1 (2004) 19면.

29) Deleuze and Guattari, 앞의 책 127-128면.

30) Deleuze and Guattari, 앞의 책 367-370면

31) 같은 책 372면.

경험적이고 신체적인 감각을 수용하고 의식과 성찰에 선행하는 감응적 과정들을 이용한다.³²⁾ 그 목적은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 분기, 그리고 창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³³⁾

이른바 ‘포스트-질적 연구’ 접근들³⁴⁾ 역시 재현을 추구하지 않는 소수과학의 개념에 영감을 받았다. 그것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뷰와 같은 인간주의적 방법들을 거부하고, 비인간 물질의 감응성을 탐구할 수 있는 접근들을 선호한다.

캐런 바라드의 ‘존재-인식론적’ 관점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항상 분리불가능하게 ‘내부-작용(intra-action)’하여, 관찰자가 항상 관찰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연구자가 어떤 특수한 연구의 설계, 방법, 이론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은 연구대상에 한 특정한 관점을 확립하게 만드는데, 이를 바라드는 ‘행위자 절단(agential cut)’이라고 부른다.³⁵⁾ 상이한 방법들과 방법론들은 데이터를 다중적 방식으로 ‘절단’하고 연구자 자신의 이론들, 통찰들, 성찰들과 ‘내부-작용’을 한다.

닉 폭스와 팜 알드레드는 이런 다양한 신유물론의 방법론적 접근들을 이용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자세한 미시정치적 분석을 하였고 연구-어셈블리지(research-assemblage)의 면에서 특수한 연구 설계와 방법들을 분석하였다.³⁶⁾ 신유물론적 관점에서는 각각의 모든 연구행위는 일종의 연구-어셈블리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즉 특수한 연구 도구들(설문지, 인터뷰 스케줄, 과학적 장치); 기록 및 분석 기술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론적 틀과 가설들; 연구문헌과 선행연구의 발견들; 연구 방법과 기법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연구할 ‘사건들’; 연구가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과 기관들; 과학연구의 틀과 문화; 윤리적 원칙과 위원회; 도서관, 저널, 저서와 편지; 인간연구자들 자신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³⁷⁾

이 복잡한 어셈블리지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윤리적 심사 등과 같이 연구과정 내의 특수한 임무들을 담당하는 일련의 보다 단순한 연구기계들로 분해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기계’는 한 사건의 측면들을 그 원자재로 삼아 그것을 ‘데이터’로 변형시킨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계는 어떤 접근(예컨대 통계 또는 테마분석)에 특수한 규칙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일반적 결론 또는 요약 등의 형태로 ‘결과’를 생산해낸다. 샘플링과 같은 연구기법들, 윤리적 승인 또는 데이터 타당성분석 역시도 한 연구-어셈블리지에 연결하는 기계들로 취급될 수 있다.

연구-어셈블리지를 구성하는 기계들을 함께 분석해보면 사건이 연구될 때 일어나는 미시정치적 운동들과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가를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무작위 검사에서 실험조건을 통제하고 통계기법을 적용하는 연구기계들은 ‘현실세계’ 무대에서 발견되는 ‘혼란스러운’ 관계의 감응적 역량을 제한함으로써,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오염되지 않은’ 효과를 모델화할 수 있게 연구-어셈블리지에 힘을 주지만 불가피하게 그 연구

32) Derek McCormack, “Diagramming practice and perform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3.1 (2005) 122면.

33) Nigel Thrift and John-David Dewsbury, “Dead geographies - And how to make them l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4 (2000) 416면.

34) Patti Lather and Elizabeth A. St. Pierre, “Introduction: post-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6.6 (2013) 629-633면.

35)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7) 185면.

36) Nick J. Fox and Pam Alldred, *Sociology and the New Materialism: Theory, Research, Action* (London: Sage, 2017).

37) Nick J. Fox and Pam Alldred, “New materialist social inquiry: designs, methods and the research-assemblag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8.4 (2014) 399-414면.



를 ‘현실생활’ 조건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반면에 질적 연구의 자연주의적 연구기계들은 사건에 대한 인간 응답자들의 설명을 특권화하지만, 또한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설명을 해석하는 연구자의 역량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연구설계들의 상이한 미시정치는 그들을 구성하는 연구기계들 내의 특수한 감응경제들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7.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회과학에서의 신유물론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새로운 학문적 및 실천적 가능성들을 요약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신유물론은 그 존재론이 매우 독특하며 사회과학에서 처음으로 탈인간중심적 이원론에 기초하여 사회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즉 신유물론은 사회과학의 탄생부터 20세기까지 그 존재론적 토대를 이루었던 인간중심적 이원론 하에서 서로 분리된 것으로 당연히 취급되었던 문화를 자연에, 인간을 비인간에, 물질을 정신에 다시 연결해준다. 이는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하였던 기존 사회과학의 지평을 크게 넓혀줄 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영역을 다루어온 자연과학과도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사회과학이 당면한 오늘날의 하이브리드적 세계에서 이는 스노우가 말한 “두 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현실적합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지금 세계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지구적 위기는 18세기 이래 서구가 주도해왔던 ‘근대화’의 연장선 상에서 20세기 후반에 급속히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우리는 인간중심적 이원론에 따라 지구화가 인간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만 기대했지, 그 지구화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바이러스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화나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항상 그런 변화는 인간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의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이 때 비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세심하게 살펴 행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특히 우리는 야생동물과의 기존 관계가 바람직했는가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보인다.

또 시야를 우리나라로 좁히더라도, 1960년대 이후 한국이야말로 서구를 따라 ‘근대화’를 국가의 지상목표로 수용하였고 그 결과 제3세계 중 드물게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근대화의 저변에 깔린 인간중심적 이원론을 의심의 여지없는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서구보다 더 기후변화, 미세먼지, 인수공통전염병, 동물학대, 쓰레기문제 등 인간중심적 근대화가 초래한 심각한 위협과 생태위기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이런 근대화가 초래한 비인간 세계의 파괴와 변형 같은 근본적 변화를 그동안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의 심층적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대안으로서 탈인간중심적인 ‘생태화’를 모색하는 데 우리나라도 신유물론의 통찰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먹거리 시스템의 생태사회적 전환을 향한 먹거리 정의 접근

한상진 | 울산대학교 교수





먹거리 시스템의 생태사회적 전환을 향한 먹거리 정의 접근

한 상 진
(울산대학교 교수)

1. 생태사회적 전환 - 병리적 경로의존성으로부터의 탈각

2020년의 자연은 인간과 공존하는 비인간 생명체가 인간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일 뿐이라는 근대적 발상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폭로해 왔다. 지구적 근대화가 결과한 위험사회는 ‘코로나19’라는 미생물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더 위협해지고 있다. 장마가 아니라 ‘우기’로 바뀐 집중호우의 여름은 기후위기의 또 다른 모습임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경제성장의 경로의존성 탓인지, 감염병 창궐과 신종 기후양상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여름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에 사로잡혀 있다. 시장경제는 비인간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자연을 ‘돈’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의미의 부동산으로 의제화하고, 공적 성격의 토지에 대해 사적 소유제도에 의한 가격을 부과한다. 인간은 지구를 임차해 살다가는 존재인데도, 자가소유자는 물론 소위 개혁적 정치인까지 땅값 떨어진다 고 임대주택의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제도는 ‘시간에 걸친 높은 정도의 지속성’으로 정의된다. 구딘(Goodin, 1996)에 의하면, 제도 내에서는 안정적이고 순환하는 반복적인 패턴화된 행위의 성격이 발생한다. 그런데 근대적 위험의 차원에서 보면, 제도가 갖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속성은 오히려 병리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시장제도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시장이 그것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해진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집’이 거주 방편이지 투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시장제도에 길들여진 사람이 많아져 겹 투자에 골몰하게 되면, 부동산 세금 강화로는 집값 상승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된다.

드라이젝 등(Dryzek et al., 2019)은 병리적 경로의존성(pathological path dependency)에 대해 ‘지구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억압하고 협소한 경제적 관심에 대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앞세우는 환류 기제의 체현을 통한 인간 제도의 지구 시스템으로부터의 탈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병리적 경로의존성은 근대 주요 정치제도인 주권국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인간노동과 자연의 가치를 화폐 기준의 가격으로 환원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근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서 비인간 생명체는 전반적으로 무시되거나 기껏해야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토지 및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이 개념은 토지의 경제적 유용성을 위한 재산권 부착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생태사회적 전환(ecosocial transition)에 필수적인 정치제도의 변화에서 사적 소유권 문제가 중요함을 암시한다.

‘병리적 경로의존성’은 에너지전환, 도시전환 등 전환 담론의 홍수 가운데 어떤 전환이 진정한 생태사회적 전환인가를 판별하는 틀로 응용 가능하다. 예컨대 수소산업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후위기의 경감에 기여할지라도, 그것이 제조업 침체에 대한 대안적 성장동력으로 취급되는 한 경제성장주의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듯 생태사회적 전환은 경제성장주의 프레임이라는 경로에 대한 중독적 의존에서 벗어나 사회-생태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다.¹⁾ 그것은 생태적 우선순



위가 환류되는 회복탄력적 자원순환의 체계를 확보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사회체계의 정의를 확보하는 ‘정의로운(just) 회복탄력성’의 원칙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생태사회적 전환은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지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현재 전 세계가 겪는 바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하자는 입장 또한 넘어선다.²⁾ 물론 그것의 핵심 목표는 근대화 핵심 기제인 시장제도가 갖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데에 있다. 생태사회적 전환은 탈성장 담론과 긴밀히 연관되나, 탈성장을 위한 GDP 비판 등에서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병리적 경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회복탄력적 SES의 경로를 도출,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사회적 전환은 SES의 생태적,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체계의 작동(특히 그 핵심기능으로서의 경제성장 지향)이 생태계 회복탄력성과의 상호의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을 변환해 나가는 것이다.

이미 50년 가까운 과거에 ‘성장의 한계’ 담론은 경제성장의 병리적 경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했으나, 어떠한 정치제도가 탈성장(degrowth)을 향한 전환에 필요한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근대국가는 국내질서 유지, 적대국가 위협에 대한 대처, 이 둘을 위한 화폐의 확보를 주요 과업으로 한다. 나아가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볼 때,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탈물 질주의에 기반한 환경주의는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번영 확대에 부수되는 측면이 있다. 생태사회적 전환은 지구적으로 동시적인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회복탄력적 상호 교류를 요구하므로, 서구에 한정된 ‘풍요 이후’의 웰빙 추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태사회적 전환은 생태적, 사회적 배제가 중첩되는 빈곤층, 여성, 이민 집단 등 사회적 약자 중심의 환경정의운동에서 그 주도세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2.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넘어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으로

먹거리는 인간과 동물의 성장에 기여한다. 또 인간, 동물의 사멸은 지구의 토양과 물, 에너지로 순환되어 새로운 식물과 동물 및 인간의 먹거리로 통합된다. 먹거리 시스템은 “씨앗에서 식탁까지 다양한 먹거리 경로를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관계의 집합으로 어떻게 왜 무엇을 먹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Gottlieb et al. 2013). 먹거리 시스템이 생태사회적으로 지속되려면, 이러한 과정이 역동적이되 반드시 회복탄력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1)에서 맷씨스가 언급한 첫 번째 거대한 전환 이후 화석연료에 기초한 산업체계의 먹거리 시스템은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간 먹이사슬이 유지해 온 순환과정의 회복탄력성을 끊임없이 저해해 왔다. 따라서 먹거리 시스템의 생태사회적 전환은 먹거리를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대한 병리적 경로의존성에서 탈출시키려는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의 지향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1992년 이후 성장의 한계 담론을 계승해 출현한 지속가능 발전론은 ‘지속가능한 먹거리’³⁾라

- 1) 맷씨스(Mattheis, 2017)는 생태사회적 전환 모델이 먹거리 생산 및 보급, 지방 거버넌스, 교통 및 주택, 문화생활 등 더 많은 실제적 활동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생태사회적 전환은 두 단계에 걸쳐 발생해 왔는데, 첫 번째 단계는 폴라니(Polanyi, 1944)가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에서 언급하듯이 태양에너지와 토지이용에 근거한 농업체제가 화석연료와 다양한 변환기술에 기초한 산업체제로 변화된 것을 가리킨다. 한편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생태사회적 전환은 화석연료의 한계로 인한 화석연료로부터 태양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를 향한 이동으로, 파국적 기후변화를 회피하기 위한 인류세(anthropocene)의 전환 노력에 해당한다.
- 2) 정상상태 경제 모델은 효율성 개선이 투입 대비 산출의 증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산출이 정체된 상태에서 투입의 감소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식을 일깨운다. 그러므로 생태사회적 전환을 위해 정상상태 경제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후자가 전자를 향한 출발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다.

는 해결책으로 응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 개념이 먹거리 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에 충분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속가능 발전’은 생태적 관심보다 경제, 안보, 복지를 본질적으로 우선시하는 근대 주권국가가 환경주의자와 타협하기 위해 고안한 모호한 개념으로, 근대 시장경제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문제삼지 않음으로써 지속불가능한 지구를 결과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은 자연자원에 대한 특정 활동, 과정, 이용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기적 능력을 의미한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이 개념은 본 논문이 강조하는 회복탄력성과는 부합하지 않게 (1) ‘인간은 무엇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2) ‘인간은 일정한 지속가능성, 안정된 균형, 또는 제한된 변동성의 범위 내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할 역량이 있다’고 전제한다.⁴⁾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30여년 추구했어도 현실의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비규모는 커져만 갔고 생물다양성 역시 급속히 사라져 갔다.⁵⁾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집단마다 인간과 환경 사이 관계를 서로 다르게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이들 다양한 가정을 ‘세 개의 기둥’, ‘중첩된 원’, ‘내포된 영역’이라는 세 가지 모델(Benson et al. 2017)로 식별하고, 이들 모델과 유사한 논법을 구사하는 먹거리 담론으로 각각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 먹거리-에너지-물의 넥서스 접근,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 접근을 연계시킬 것이다. 2015년 UN이 권고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 등 주류의 접근은 경제, 사회, 환경 각각을 별개로 취급하는 ‘세 개의 기둥’ 관념에 입각해 있다. 필자는 ‘중첩된 원’, ‘내포된 영역’ 등 후속 모델로 갈수록 지속가능성 담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회복탄력성 관점이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1) 세 개의 기둥 모델과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

‘세 개의 기둥 모델’은 경제, 사회, 환경을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지표 및 목표를 추구하는 주류 모델로서, 한국의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도 지배적인 접근이다. 세 개의 기둥 모델(<그림1>)은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생태, 경제라는 주요 축을 동등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지만, 세 시스템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 모델은 기둥 간 연관관계를 무시하는 가운데, 환경을 거의 항상 가운데 기둥에 위치시킨다. 이는 환경이 제거된다고 해도 지속가능 발전이 경제와 사회라는 나머지 두 기둥에 의해 지탱될 수 있

- 3) 국제식품정책연구소(IFPRI, 2011)는 2020년을 향한 비전에서 ‘지속가능성 먹거리’ 개념에 대해 ‘모든 사람 가운데 영양실조가 부재하고 식품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양립하는 효율적, 효과적이며 저비용의 먹거리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속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세계’로 이해하고 있다.
- 4) 본 논문의 입장과 약간 다르지만 이해진(2019: 86)은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회복력)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지속가능성이 장기적 수행을 평가하는 규범적 도구라면 회복력은 혼란에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단기적 능력과 관련(된다...) 회복력이 없으면 지속가능성도 불가능하다. 회복력은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회복력은 주제와 구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분석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5) 버거(Burger)는 지속가능성이 30년 간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 아이디어였지만, 그 근처에는 이상주의적, 기만적 담론이 깔려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 환경정책을 만들어낸 반체제 사회운동의 핵심부에서 근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지속가능성 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즉 환경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고무하기보다는 자본주의와 소비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일괄하여 다루고 기존 행위자와 위계를 구체화하며 사회조직, 생산, 소비의 기본 패턴을 지지한다. 한 마디로 그것은 여러 면에서 지구적 기후변화를 초래한 기존 역학관계를 영속화하는 기만적 담론일 뿐이다.”



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 개의 기둥 모델은 지속가능 발전 전반은 물론,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가 재화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르게 기능하는 생태계에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모델은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환경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다는 담론을 영구화한다. 세 개의 기둥 모델은 모든 사회체계와 경제체계가 환경에 의존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지극히 교묘한 방법으로 훼손하는 발상을 담고 있다(Benson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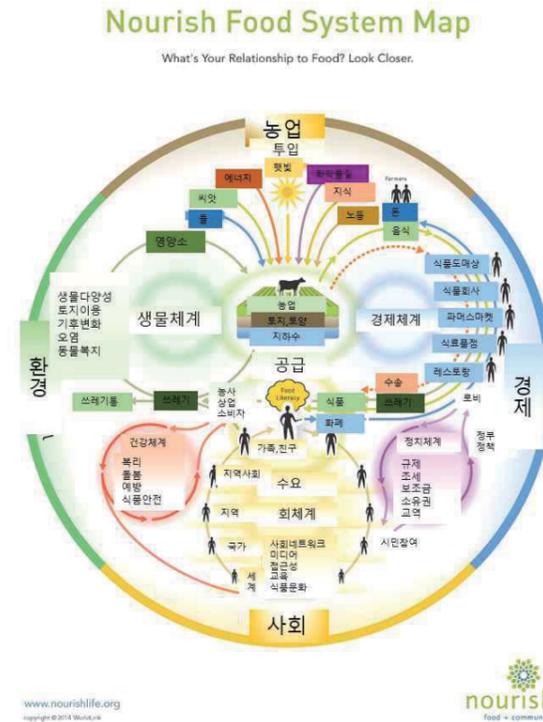
<그림1>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세 개의 기둥 모델



<그림2>는 세 개의 기둥 모델과 유사한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나타낸다. 이 모델은 환경, 농업, 경제, 사회라는 네 개 기둥 간 기능적 상호의존에 관심을 두지만, 먹거리 시스템의 전제조건인 환경을 농업, 경제, 사회와 동일한 비중을 갖는 생물체계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다(Neff, 2015). 생물체계 내 종의 다양성, 토지이용, 기후변화 등과 같은 하위체계는 농업을 먹여 살리는 영양분을 만들거나 파괴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만 이해된다. 한편 농업으로부터 나온 먹거리는 도매, 먹거리 가공으로부터 수송 및 상점, 레스토랑과 농부시장(farmers' market)을 포함하는 분배체계에 이르는 경제체계를 통해 순환한다. 이와 함께 사회체계는 수요 시스템으로서 생활환경이자, 먹거리 기회 및 그러한 기회를 추동하는 문화, 마케팅, 행동변화 개입 등의 요소를 만드는 사회환경으로 설정되고 있다.

기능주의 먹거리 시스템의 틀에서 보면, 빈번한 가뭄 및 홍수, 균열된 농업정책, 유전자조작 종자로부터 산업적 가축생산에 이르는 대기업 집중 및 독점적 통제, 오염된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농민들이 노출되는 현실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세 개의 기둥 비유의 연장선 위에서 유추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라는 어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인구성장을 압도하는 식량 증산의 이미지를 설파할 뿐이다. 체계이론의 기능주의적 발상은 식량 생산 및 소비를 둘러싼 불평등은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위협에 어떻게 회복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먹거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는 저비용으로 기아, 영양실조에서 탈피하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체계의 농업기술 관심에 국한되어, '식품안전'을 역동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태복지의 과제들을 제대로 포괄할 수 없다.

<그림2>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주의적 모델



2) 중첩된 원 모델과 먹거리-에너지-물의 넥서스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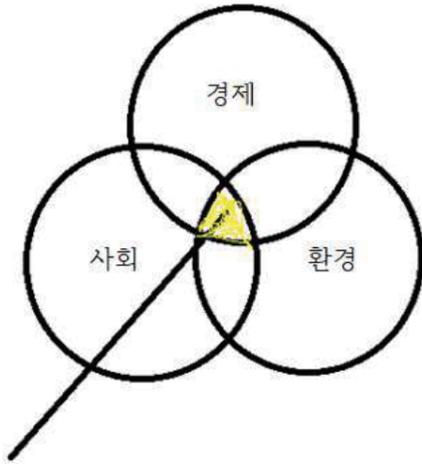
중첩된 원 모델(<그림3>)은 '전통적 규율 상 경계와 기존 정책결정 부서를 가로지르며 지속가능 발전의 사고와 행동이 통합될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3중 중첩영역은 경제, 사회, 환경의 목표가 최대화되는 영역에서 상호지지적 이득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전체 영역에 비해 중첩된 영역이 작다는 것은 많은 활동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발상을 바꾸면 중첩 영역이 확대될 잠재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림3> 또한 사회, 경제, 환경을 동등한 잣대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개념화함으로써, 한 영역(경제)에서의 발전을 다른 영역(환경)에서의 악화와 바꾸는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파악되고 있다. 그 결과 중첩된 원 모델은 세 개의 기둥 모델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의 환경 '최저선'을 훼손하는 '약한 지속가능성 접근'을 교묘하게 지지하게 된다(Benson, 2017).

한편 <표4>가 나타내는 먹거리-에너지-물(Food-Energy-Water; 이하 FEW) 넥서스는 경제-사회-환경의 중첩 모델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지만, 먹거리 시스템이 생태사회적 차원에서 에너지, 물과 연결됨을 강조하는 논리적 유사성이 있다. 우선 먹거리는 에너지에 대해 관개, 비료, 수확, 가공 및 저장이라는 영향을 받고,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다음으로 먹거리와 물은 관개와 가공, 그리고 수질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접근이 근거하는 관점들은 다음과 같다(Asadi et al. 2020). 첫째 인간과 그들의 욕구를 FEW 넥서스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둘째 먹거리, 에너지, 물의 작동이 변형하는 데 필요한 공공 지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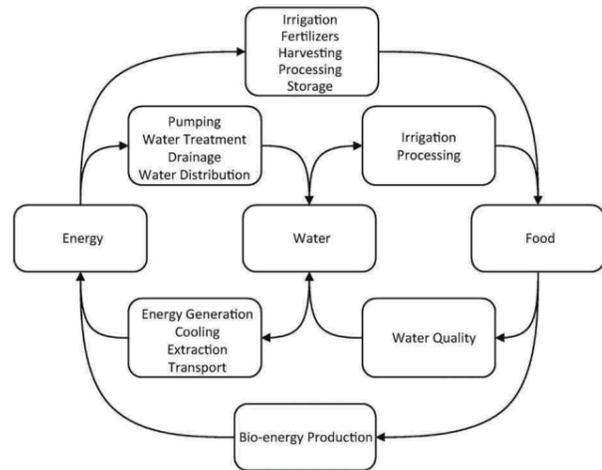
가동시킨다. 셋째 넥서스의 준비와 작동 과정에 지방집단들을 참여시킨다. 이렇게 볼 때 FEW 넥서스 모델은 먹거리와 여타 생태계가 중첩된다는 논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중심적, 기술중심적 초점이 견지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3>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중첩된 원 모델



지속가능발전

<그림4> 먹거리-에너지-물의 넥서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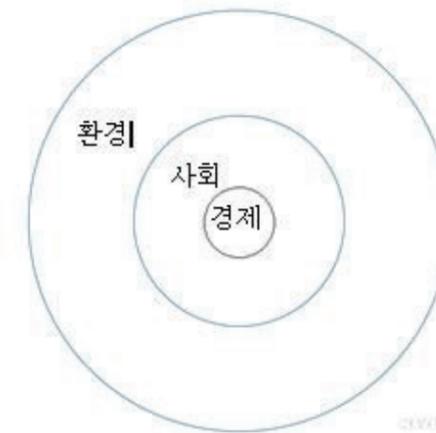


3) 내포된 영역 모델과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 접근

내포된 영역 모델(<그림5>)에서는 “생태라는 더 큰 원에는 경제를 나타내는 원과 사회를 나타내는 원이 포함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환경적 한계가 지속가능 사회와 경제를 추구할 때의 경계선을 정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모델은 “지구 시스템의 작동에 해를 끼치는 활동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의 토대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내포된 영역 모델은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중요한 자연자본, 더 넓게는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풍부하고 잘 작동하는 환경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경제성장론자들조차 기후위기가 지속가능 발전의 기획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점차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⁶⁾ 사람들은 이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잘 작동하는 환경을 유지해야 최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림5>는 발전의 한계 앞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또 생태적 한계로 인해 바람직한 성과(지속적 발전, 빈곤 완화, 번영의 증진, 환경 보호와 회복)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불가능할 때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포된 영역 모델은 환경적 제약 가운데 경제 및 사회의 지속 필요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외부 교란에 대한 지지 역량에 주목하는 회복탄력성 모델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해진(2019ㄱ: 84)에 의하면, 기존의 개인적, 생태적, 공동체적 회복탄력성 패러다임은 회복력의 과정과 주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된다.

<그림5>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내포된 영역 모델



이해진(2019ㄱ)은 사회(학)적 회복탄력성 모델에 입각하여, 먹거리 위험과 재난에 대응하는 ‘관계적 회복력’을 강조한다. 그런데 병리적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려는 생태사회적 전환의 전망에서 볼 때, 먹거리 위험 및 재난의 원인인 경제성장의 경로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사회 체계 수준의 관계 재구성 시도가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본 논문의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 접근은

6) 삭스(Sachs)는 2015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서 “도시의 위치,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 우리의 산업을 가동시키는 기술 등 우리 문명의 모든 것은 지구에서 곧 사라질 기후 패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가 지속가능 발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체계를 그것이 근본적으로 의존하는 생태계로부터 탈구시킬 경우 그 회복탄력성이 저해됨을 명확히 한다. 먹거리 시스템이 더 이상 병리적 경로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처방은 생태계 회복탄력성을 고려하는 탈성장이나 먹거리 커먼즈(이해진, 2019ㄴ)의 확산 등 생태사회적 전환 말고는 없다. 사회(학)적 회복탄력성 모델은 자연/소비/생산의 연결, 지식과 권력의 배분, 규제와 조정, 분권화,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시스템의 회복력에 접근(이해진, 2019ㄱ)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생태적 접근보다도 생태계와 비인간 동식물의 위상, 역할을 격하하는 문제가 있다.

3.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을 향한 먹거리 정의의 접근 사례

필자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입장은 국내 논의 중에는 이승원(2016)에 가까운 편이다. 그는 ‘시스템의 전환’, ‘전환의 정치’의 필요성 아래, 회복력에 대해 평등 수준이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의 구축을 둘러싸고, 먹거리 시스템 주제 간 평등이라는 분배적 쟁점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병리적 경로의존성의 탈각이라는 절차(제도)적 쟁점, 비인간 동식물의 문제와 같은 승인적 쟁점 또한 추가하고자 한다. 요컨대 먹거리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접근은 분배, 절차, 승인 등 먹거리 정의의 요소들과 연계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및 먹거리 안전의 요소를 식별하고, 분배, 절차, 승인이라는 측면에서 먹거리 정의의 접근 및 관련 사례들을 살피기로 하겠다.

1)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의 요소들

회복탄력적 시스템은 생태기능 및 인간복지를 보전하기 위한 장기적 변동을 기대하여 후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전환으로서의 새로운 회복력 개념은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전환과 변혁을 산출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강조한다(이해진, 2019ㄱ, 85).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을 둘러싼 쟁점들은 지구적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산업적 가치체계의 성장, 연료를 위한 작물의 이용 증가와 같은 승인의 문제에도 걸쳐 있다. SES 관점에서 보면, 건전한 생태계에 의존하는 먹거리 시스템은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인 생태적 통합이 특정 문턱을 넘어설 경우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역량은 많은 농업 관련 생태계 서비스(인간의 삶에 종종 핵심적인 생태계로부터의 혜택) 가운데 하나이다.

생태계 서비스에는 네 유형이 있다. 첫째 제공 서비스로, 재화(식량, 약품, 목재, 섬유, 바이오 연료 등)의 직접 공급이다. 둘째 규제 서비스로, 자연과정의 비율 및 범위의 통제(물의 여과, 폐기물 분해, 기후규제, 곡물의 수분, 인간 질병의 규제 등)이다. 셋째 지지 서비스로, 기타 모든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기능들(생태를 통한 영양물질의 회진, 광합성, 토양 형성 등)이다. 넷째 문화 서비스로, 생태계와의 인간관계로부터의 심리적, 정서적 이득(레크리에이션적, 미적, 영적 경험들)이다. 지구 생명체를 지지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약 60%는 식량, 섬유, 목재를 위한 과거 및 현재의 토지 관리에서 비롯된 많은 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현재의 인간은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향유하여 그 가치를 종종 인지하지 못하나, SES의 문턱 상황에 따라 그것의 대치는 너무 비싸져서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의 사회적 관심사는 먹거리 안전으로 대표된다. 먹거리 안전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순간에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적 욕구와 먹거리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FAO, 1996). 먹거리 시스템과 먹거리 안전 간 연계는 먹거리의 생산, 가공,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체계와 그것을 떠받치는 생태계 간, 그리고 양자 내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회복탄력적 먹거리 시스템은 먹거리의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및 먹거리 활용이라는 먹거리 안전의 네 가지 요소(Ziervogel, 2009)에 기여한다.

첫째 먹거리 가용성은 식품의 생산, 분배 및 교환에 의존하며, 적절한 곡물, 가축, 어류 등의 생산 뿐 아니라 야생 먹거리의 수집, 이민 및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자원까지 포함한다. 먹거리 가용성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건강이 우선적이지만, 국내 생산, 신뢰할만한 수입 역량, 먹거리 재고의 존재, 먹거리 원조에 대한 접근성 등도 먹거리 공급의 보증 요소가 된다.

둘째 먹거리 접근성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아를 수요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충분성, 배분 및 선호를 가리킨다. 빈곤과 취약성은 가구 및 개인의 구매력은 물론, 먹거리 접근성을 지배하는 사회동학에 관계되는 변수이다. 도시화는 소득 및 사회적 연계망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으로써, 먹거리 분배체계의 영향력을 제고한다. 사회복지 제도와 같은 국가의 경제적 보장 또한 적절한 먹거리 수송 장소와 시장 하부구조의 존재에서 반영되듯이 접근성의 요소이다.

셋째 먹거리 안정성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공급 및 접근에서의 연속성에 관련된다. 먹거리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후가변성, 가격유동성 및 정치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먹거리 공급 및 소득의 계절적 변이 등이 있다.

넷째 먹거리 활용은 한 사람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질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 질병 등에 의존하는 식품 및 영양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해당한다. 취약한 건강, 불량한 위생 및 부적절한 안전 기준이 만연한 나라들에서는 만성 질병이 사람들의 소화를 조절하며 섭취하는 영양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먹거리 정의 접근의 사례들

랭(Lang)과 히즈만(Heasman)은 먹거리 시스템 내 불의가 증가하는 특징으로, 먹거리의 잘못된 분배, 좋은 식단에 대한 취약한 접근, 노동과정의 불평등과 먹거리 사슬에서의 핵심 공급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등을 지적한다. 고틀리에프 외(Gottlieb et al. 2013)는 먹거리 정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식별하는데, 하나는 단순한 정의로서 어떤 먹거리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생산, 운송, 분배, 접근, 소비되는가의 이득과 위험을 확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먹거리 불의가 어떻게 경험되며 그것이 도전받고 극복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명함으로써 먹거리 정의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둘러싼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측면(한상진, 2017)이 먹거리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각각의 접근 사례가 갖는 특성을 정리하기로 한다.

(1) 분배적 먹거리 정의의 접근 사례

먹거리 시스템을 둘러싼 분배적 정의의 접근은 무엇보다 정부, 기업의 먹거리 관련 시장 논리와 차별화되는 협동조합의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간 평등에 대한 추구로 대표된다. 이와 함께 외국의 예로는 산업적 먹거리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 텃밭운동이 있다. 전자의 사례로, 이해진(2019ㄱ: 121)은 DDT 김출이라는 먹거리 위험 파동에 대응하여 대안적 먹거리 시스템



을 지향하는 협동조합이 어떻게 회복력을 구축했는지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 정부는 먹거리 위험을 생산자가 책임지게 하는 위험권력인 반면 협동조합은 생산자, 소비자 등 주체 간 권력관계를 민주적, 공동체적 방식으로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먹거리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편 도시 텃밭운동은 여유롭고 건강한 먹거리 접근, 지역사회 자기결정,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먹거리 정의를 향한 투쟁의 유력한 전략으로 옹호되어 왔다(Alkon et al, 2017).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텃밭 농사는 대개 단기간만 빈 땅에 허용되는데, 보통 지주들은 경제위기 이후 개발을 선택함으로써 텃밭을 제거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도시농업이 대중화되어 왔으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토지시장은 공적, 사적 재산을 점점 더 텃밭 경작이 아닌 용도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정의운동 조직들은 먹거리 안전은 물론 문화적 권한강화, 도시생태의 변형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도시에서의 텃밭 경작을 증가시키고 있다.

(2) 절차적 먹거리 정의의 접근 사례

다음으로 절차적 먹거리 정의의 접근은 거시적,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 거시적 차원의 사례로는 병리적 경로의존성으로부터 먹거리 정책을 탈피시키려는 시도, 먹거리 재난을 준비하는 도시 스케일의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맥락에서 병리적 경로의존성이라는 제도적 제약과 분배적 정의 간 스케일 긴장(scalar tension)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 때 먹거리 시스템을 둘러싼 스케일 긴장이란 협동조합 스케일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간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지구적, 국가적 스케일에서 관찰되는 병리적 경로의존성이 분배적 먹거리 정의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앞의 이해진(2019⁷⁾의 논의는 일시적인 먹거리 위험에 대처한 분배적 정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익명투고자(2020)에 의하면, 또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 오너 파트너십(owner partnership) 절차를 통해 ‘주인되기’의 참여가 사업체 자본금 확보를 위한 출자 문제로 소급되는 등 일상적으로 시장 중심의 규율이 관찰되고 있다.⁷⁾ 이는 시장제도에 대한 병리적 경로의존성이라는 지구, 국가 스케일에서의 절차적 불의가 변전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 스케일에서의 분배적 먹거리 정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거시적 사례로 미국 록펠러 재단이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내부도시 계획(Initiative for a Competitive Inner City; 이하 ICIC)에 의하면, 도시 지도자는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따른 먹거리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각 도시 내 먹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현존하는 먹거리 계획이 회복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정, 변경한다. 셋째 도시 내 먹거리 시스템의 균형적 제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먹거리 불안정성 및 불충분한 유통망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는 먹거리 은행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지향한다. 넷째 생존이 어려운 소규모 식당을 지원하여 도시 먹거리 시스템의 회복력에 도움이 되도록 장려한다. 다섯째 식당 관리를 위한 정책 기준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여 이들이 재난 이후 영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들은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의 원칙 아래 분배적, 승인적 정의로의 전환 기준을 충족

7) 사례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조합원의 자발적인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운동과 농촌 생산자의 생산품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노동자의 마케팅 능력 등이 자발적 참여로 논의되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참여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시장 중심적 경향과 소비주의는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참여’의 담론은 소비-유통 측과 농민 생산자들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나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시장중심적 규율과 시선의 문제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작동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시적 차원의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는 먹거리 정의의 발전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정책 대상으로 국한되는가, 아니면 먹거리 거버넌스를 주도하는가라는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2012)에 의하면,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2011년에 4년 주기로 처음 마련된 이후 2015년,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진화되어 왔다. 이후 연구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척도로 국가, 지자체 수준의 식생활교육 네트워크가 10년 동안 절차적 정의를 얼마나 확산해 왔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승인적 먹거리 정의의 접근 사례

마지막으로 승인적 먹거리 정의의 대표적 접근 사례는 산업적 축산에 대한 저항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위협받는 보건체계는 동물 축산에서의 항생제 오용과 연결된 항생제 저항의 감염 위기에 의해서도 꾸준히 도전받아 왔다. 그러므로 먹거리 시스템이 회복탄력성 궤적에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결정인자 뿐 아니라 SES의 생물리적 동학에 대한 초점도 요청되고 있다. 수많은 작물 및 동물체계는 소비 가능하거나 시장화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이라는 단일한 생태계 서비스를 위해 관리된다(Chapin III, 2009: 268).

그런데 생태적 회복탄력성을 지지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작물 및 동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목표는 종종 정치제도 지지, 세계적 시장기회에 대한 반응, 빈곤 감축, 먹거리/먹이/연료를 위한 외부적 수요 부응 등 단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우선순위와 충돌할 수 있다. 가축은 전통적으로 농업 시스템과 통합돼 있었고 그들의 식량원천과 밀접하게 길러졌으며, 작물생산의 투입(토양, 영양분 및 경작)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도시화와 대규모 소매 체인의 발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료, 개선된 수송, 사육 및 가공에서의 기술혁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 산업의 수직통합 등은 집약적 가축체계의 산업화와 공간집적을 가능케 했다.

더욱이 먹이는 국제시장에서 최저비용 기초로 공급되며 먹이의 구성은 농업 부산물에서 영양과 상업적 가치가 더 높은 곡물 및 생선 먹이들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화의 패턴은 특히 소, 양, 염소 등과 같은 반추동물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먹이를 집중하여 사용하며 급속한 유전자 개량에 유리한 단명 주기를 갖는 돼지, 조류 등 위가 하나인 동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가축생산이 그것을 지원하는 자원기초로부터 탈각된다면 지방적 스케일로부터 지구적 스케일까지 먹거리 시스템의 회복력은 문제로 남게 된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생략

커먼즈의 전환 정치

안새롬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커먼즈의 전환 정치

안 세 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과, 경로 혹은 정치

1)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전환은 현재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일컫는다. ‘변화’ 대신 ‘전환’이라 부르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transformation),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의 시스템으로의 단절적 이행(transition)과 같은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전환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부터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담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표출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야 인류 사회 시스템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산시킨 1987년 발간된 브루틀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현 시스템을 성찰하면서 환경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전면화한 보고서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보존외과 경제/사회 발전을 상충하지 않게 결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 틀 내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만들어 냈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전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UN총회가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결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전환을 논의하는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시스템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시스템 전환이라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거나 목표의 성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 발전에서 ‘환경’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달성 가능하다. 여기서 경제, 사회, 환경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내재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있기보다는 분절되거나 외재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존재론·인식론은 환경 이슈를 ‘환경’ 영역에 가두어둠으로써 환경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제/사회 발전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가정한다(구도완 외, 2017).

‘지속가능발전’이 가정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의미를 재정립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그러한 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 글은 ‘지속가능발전’과 그 구상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비롯한 많은 전환 논의들이 전환의 결과 내지 최종 상태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전환의 결과로서 특정 상태의 시스템을 제시한 것이다. 전환 이후 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현재 시스템보다 더 나은 특정한 시스템을 가정하거나 선택하는 작업이다. 특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개인이나 조직, 사회, 환경에 주는 혜택이 크다고 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환의 최종 상태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 대하여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더 나은 상태로 여겨지는 특정 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목표에 긍정하고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비롯한 연구 흐름에서는 전환을 위한 사회-기술-문화적 조건과 전환의 경로를 탐색한다. 둘째, 전환은 최종 상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가는 매끈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과 같이 전환 비전이나 방향을 지시하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사회적 기초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이라는 목표(레이워스, 2018)에서도 어떤 상태를 생태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사회적 '기초'로 볼 것인지가 논쟁과 조정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개되는 연구 흐름은 전환 정치(politics of transition)에 관심을 가지며, 전환의 과정에 어떤 행위자가 등장하고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전환이 정치적으로 조정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려고 한다.

전환의 경로, 전환 정치와 같은 개념은 2000년대부터 활성화 된 '지속가능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 ST)' 연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에서 전환을 결과나 최종 상태, 목표로 바라보았다면 '지속가능전환' 연구들은 전환이 어떤 조건과 경로로 일어나는지(일어날 수 있는지), 전환에 누가 어떻게 개입하면서 전환의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지, 혹은 전환을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논쟁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준다.

2) 전환의 경로

전환의 경로는 지속가능전환 연구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다(Markard, 2017; Köhler et al., 2019). 전환의 경로 연구에서는 주로 현 시스템이 놓여있는 사회-기술적, 문화적, 제도적 조건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환의 씨앗, 혹은 틈새에서 일어나는 혁신적 실험들이 시스템의 규칙이나 경관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지 고민한다.

'지속가능발전'이 비판받았던 지점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조건에서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다. 경쟁과 수탈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 시장 조건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고 그 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이흥균,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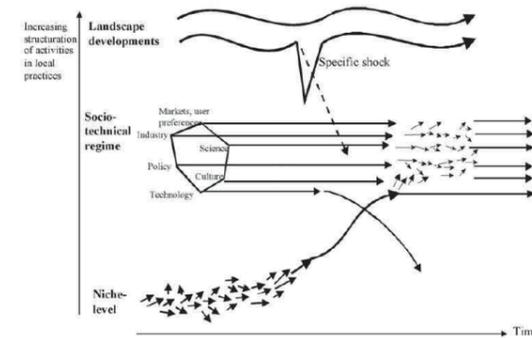
전환의 역사를 추적하고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들은 기술, 문화, 정책, 생태 등이 내재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가정하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에서 혁신이 가능한지를 통합적으로 탐색한다. 또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혁신적 실험들에 주목함으로써 전환을 좀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발전한 주요 개념으로는 다층적 접근(Multi Level Perspective, MLP),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SNM), 전환 관리(Transition Management, TM) 등이 있다.

다층적 접근이란 전환의 과정을 틈새(niche), 레짐(regime), 경관(landscape) 등 세 가지 분석적 층위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이다(Rip & Kemp, 1998; Geels, 2002). 여기서 틈새는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 레짐은 현존하는 정책-기술-문화-과학-산업 등 시스템의 규칙과 제도이다. 경관은 틈새와 레짐이 작동하는 장으로, 틈새와 레짐에 특정한 압력을 행사한다. 다층적 접근으로 보면, 전환은 혁신적인 실험이 발생하는 틈새와 경로의존성이 있는 레짐 사이 연속적인 상호작용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 다층적 접근의 핵심은 전환을 시스템 관점에서 이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역동성 사이에서 전환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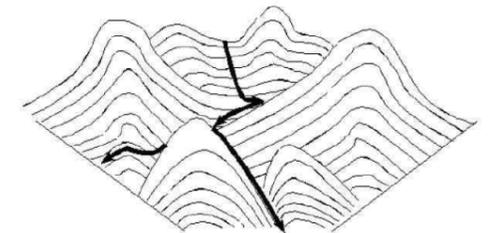
전략적 틈새 관리 연구는 다층적 접근에 근거하여 전환을 바라보되, 혁신적인 실험들이 발생

하는 틈새에 관심을 가진다. 보조금 제공 등 틈새를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전환의 경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틈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실험들은 전환의 비전과 기대가 어떠하며, 얼마나 구체적이고 견고한지,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이 있고 폭 넓은지, 학습 과정이 강조되는지 등에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mp et al., 1998; Schot & Geels, 2008). 전략적 틈새 관리 연구들은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출현하는 틈새의 실험들이 어떻게 전환의 씨앗으로 기능하여 레짐 변동을 이끌어내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전환 관리는 특정한 방식의 개입을 통해 전환 과정을 조정하는 개념이다. 전환 관리에 전략적 틈새 관리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전환 관리 연구의 주요 관심은 어떻게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협력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Rotmans et al., 2001; Loorbach, 2010). 전환 관리 연구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인 개입이 가능하고 그것이 잠재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환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전환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전환 정책을 구상한다.



〈그림 1〉 전환 경로에서 경관, 레짐, 틈새의 상호작용(Geels & Shot, 2007)



〈그림 2〉 경관에서 틈새-레짐의 경로 (Rotmans et al., 2001)

다층적 접근에 기반한 전환 경로 연구들은 잘 보호된 혹은 덜 보호된 틈새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지, 레짐과 경관이 어떻게 생산, 재생산되거나 해체, 대체되는지 등을 질문하고 전환 경로를 회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환 경로의 동역학을 개념화하는데 기여했다. 또, 전환 관리 연구들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행위자와 요인들, 불확실한 지식 등을 포함하여 전환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전환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여러 방법과 도구를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환의 특정한 경로가 존재하거나 전환이 관리될 수 있다면, 전환이 필요한 시스템, 관리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규정되고, 누구의 지식, 신념, 권한에 따라 조정되는가? 전환 경로에서 어떤 행위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전환 관리 도구와 자원은 어떻게 배치, 재배치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전환에서 지속가능성이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나,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전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비판적 질문에서 비롯한다(Shove & Walker, 2007; Meadowcroft 2009; Smith & Stirling 2010; Swyngedouw, 2010; Scoones et al. 2015)



3) 전환 정치

전환 정치 연구는 전환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또 중립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전환 관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전환 정치학에서 전환은,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것을 배제하는 과정이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특정 행위자 혹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 동반되고 권력 관계가 작동되기에, 정치적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전환의 비전이나 방향은 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 어떤 지식과 도구, 자원 등을 활용할지 선택하는 정치적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전환 관리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논쟁, 경합의 과정이며 전환의 경로란 전환 정치의 궤적이다. 전환 정치 연구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보다는, 그 방향과 과정이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일 때 이를 조정하는(steering)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며 다룰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본다(VoB et al., 2007).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에너지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며 어떤 수준과 입장에서 설정할 것인지 논쟁적이다. ‘지속가능한 핵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논의(Brock et al., 2014;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4)는 어떤 사회-기술 시스템이 특정한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일부가 ‘환경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의 상태를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시공간과 규모에서 더 지속가능한지 여전히 논쟁적이라는 점 등을 잘 보여준다. 또 광우병,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발전에 다루는 문제들의 원인이나 메커니즘은 광범위한 영역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어 비선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관련 지식의 불확실성이 높다(VoB et al., 2007).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활용할 지식과 자원을 선택하는 권력은 집중되어 있을 수도,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고정시키고 더 정확한 지식, 더 강력한 권력으로 전환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환을 ‘통제’하는 것에 가깝다.

이때 유용한 전략 중 하나는 성찰적 거버넌스(reflective governance)다. 성찰적 거버넌스란 장기간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는 전환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와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며 전환 과정을 조정하는 거버넌스이다(VoB et al. 2006). 전환 관리는 성찰적 거버넌스를 통해 통제적 혹은 관리주의적 전환 관리를 벗어나고 전환의 복잡성과 논쟁적 성격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성찰적 거버넌스를 통한 전환 관리도 모두가 합의한 질서정연한 과정일 수 없다(Shove & Walker, 2007).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전환의 목표가 재발견되고 수정되는가? 전환 과정의 무엇이,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되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전환의 틈새를 알아차리고 확장하며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 성찰적 거버넌스를 통한 전환 관리를 하는 전환 관리자(혹은 관리 그룹)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은 성찰적 거버넌스가 전환을 민주적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더라도 성찰적 거버넌스 또한 전환 정치의 도구이자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선형적이거나 합의될 수 있는 특정한 목표가 아니며, 지속가능전환은 목표로 향하는 특정한 경로이기보다는 문제를 프레임하고(problem framing), 바람직한 상태나 지식, 방법에 대해 경계를 그으며(boundary working) 다양한 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정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Meadowcroft, 2007; 김민재 외, 2018).

전환 정치 연구들은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틀에 내재된 정치, 전환 관리의 정치적 동역학에 관심을 기울인다. 전환 정치의 도전적인 질문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 ‘생

태’ 혹은 ‘자연’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는가이다. 지속가능성 논의 속에서 ‘자연’은 다중적이다. ‘자연’은 인간의 개입을 줄여 지속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공고기, 생수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열망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자연이 만들어진다(Swyngedouw, 2010).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녹색’은 보호받아야 할 ‘자연’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연’, 예컨대 강에 발생하는 녹조나 정원의 잡목 등은 관리의 대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김지혜, 2019). ‘녹색 전환’은 그 전환이 일어나는 국가나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Scoones et al. 2015). 또, 불타는 산림, 공장 연기로 자욱한 대기, 죽어가는 동식물처럼 ‘자연’은 특정 과학자나 활동가 집단이 프레임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한다(Swyngedouw, 2010).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은 전환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전환 정치 연구는 전환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비전이 지배적이게 되는지, 어떤 ‘자연’을 선택하는 전환인지, 전환 관리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환경’은 누구의 ‘환경’이고 ‘보존’ 활동이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등을 질문한다. 이 질문들은 정치를 녹색화하는(Environmentalizing Politics) 전통적인 전환 (관리)전략 구상을 넘어 녹색을 정치화(Politicizing the Environment)하는 것이다(Swyngedouw, 2013). 전환 정치에서 ‘녹색’은 전환의 종점이 아니라, 권력 관계가 만들어 낸 많은 경로들이 경합한, 균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맥락적인 ‘녹색’이다(Scoones et al. 2015).

전환 관리의 정치적 동역학에 주목하는 전환 정치 연구들은 전환 관리의 공간적, 영역적 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전환 연구들은 명시적인 국민국가 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컬(local) 수준의 혁신 실험이 중범위 수준, 국가/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는 순차적, 위계적인 전환 모델을 설정한다(Shove & Walker, 2014). 하지만 전환의 공간은 특정 지역이나 영역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으로 구성, 재구성된다(Coenen et al., 2011). 예컨대 에어컨 기술은 숙박·사무 공간, 가정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실천들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실천을 생산하고, 그러한 실천이 재생산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에어컨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고급의’, ‘적절한’ 공간이 틀지어지는지와 관련되어 있다(Shove & Walker, 2014). 이때 전환의 정치학은 에어컨 기술의 시공간적 확산 경로를 추적하거나 에어컨을 덜 사용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삼아 관리(혹은 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요구하는 특정한 실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급’ 공간은 어떻게 에어컨 기술과 만나게 되는지, 그러한 연결이 어떤 정치적, 제도적 맥락에서 가능해지고 재생산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전환 정치는 ‘전환에서 누가(무엇이) 이기고 지는가’에 대한 큰 질문을 통해 많은 전환 경로 및 전환 관리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 관계와 상징 투쟁을 드러낸다. 또,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여 많은 전환 연구들이 구축해 온 전환의 틀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전환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지형 속에서 경합하는 과정이며 더 지속가능한 것이나 더 바람직한 것은 없고 ‘지속가능성’의 정치와 ‘바람직함’의 정치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전환을 열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환 정치는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전환 정치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을 구상하는 대신, 무엇을 중심으로 전환 정치를 살펴보고 전환 과정에서 무엇을 정치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8) 많은 전환 관리 연구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에어컨 기술의 확산처럼 지속가능하지 않은(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전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그러나 전환 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의 쇠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술이나 실천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성찰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러한 전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hove & Walker, 2014).



2. 커먼즈의 전환 정치

커먼즈(communs)는 대안 정치의 키워드로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솔론 외, 2018). 공동의 것을 일컫는 이 개념은 국가의 것(국유)과 개인의 것(사유)으로 양분된 세계에 대한 믿음과 그에 근거한 실천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Federici, 2011; 카프라, 마테이, 2019). 커먼즈 개념에 주목한 많은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커먼즈 논의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커먼즈 연구 그룹을 형성했으며, 커먼즈를 그 개념이 단순 지시하는 것 이상의 많은 정치적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이론화해 왔다(표 1).

표 1. 커먼즈 이론별 커먼즈 및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해석(안새롬, 2019 재구성)

커먼즈 이론	자유주의 커먼즈론	공화주의 커먼즈론	사민주의 커먼즈론	자율주의 커먼즈론	...
커먼즈와 국가, 시장의 관계	·커먼즈는 국가, 시장과 병렬적으로 공존	·커먼즈는 국가, 시장과 다른 차원에서 작동	·커먼즈는 국가, 시장과 협력적으로 공존	·커먼즈는 국가-시장을 내파하는 씨앗	...
정치적 가능성	·커먼즈를 관리하는 공동체의 자치, 협력, 조정 역량의 증진	·커먼즈를 보호하는 국가와 시민의 공적 책임과 역할 강조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 구상	·자율적, 해방적인 공동의 역량을 통해 시스템 전환 구상	...

커먼즈를 대안 정치에 위치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은 전환 이후 시스템에 커먼즈를 포함시키려는 작업에 가까웠다. 많은 경우, 커먼즈 논의들은 규범적인 커먼즈 개념을 전제하고 커먼즈가 포함된 전환 이후 시스템이 좀 더 지속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본다. 커먼즈가 많거나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전환 이후 시스템으로 고정시키고 나면,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 경로와 전략을 구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들은 커먼즈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상태로 커먼즈에 대한 환상을 증폭시키는 한편, 커먼즈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생산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는데 소홀하다.

이 글에서는 전환 정치의 관점에 따라, 커먼즈를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커먼즈의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수많은 유무형의 사회적인 것 중에 무엇이 커먼즈로 규정되고 무엇이 커먼즈로 논의되지 않는가? 커먼즈 개념이 담지하는 공동체는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결정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커먼즈가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커먼즈의 전환 정치를 살펴보는 것은 커먼즈를 전환 정치의 자원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의 정치를 일종의 전환 정치로 해석하는 것이다. 커먼즈의 정치를 살펴보면 커먼즈 자체를 정치화하고, 커먼즈의 정치가 전환 정치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1) 커먼즈라는 발화

무언가를 커먼즈라고 발화하거나 발화하지 않는(못하는) 데에는 특정한 힘 관계가 작동한다. 커먼즈라는 발화는 어떤 것이 개인이나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의 것이고, 여기에 공동의 실천, 규칙, 관행, 권리, 도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다르게 말하면, 커먼즈로 선포되지 않은 영역에서 공동의 실천, 규칙, 관행, 권리, 도덕이 존재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무주(無主)지라는 법적 발화는 스페인 왕이 이를 점유-소유할 수 있음을 공증하면서 개척 시대를 열었고, 사적 재산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무주물로 일컬음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의 자원을 사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이 마련되었다(카프라, 마테이, 2019). ‘무주의 것’이라는 발화는 먼저 취한 사람, 기업, 국가가 고유하게 향유, 소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 무주의 것을 국가의 것으로 선언한 후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아키미치, 2007). Hardin(1968)의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론은 ‘무주’ 담론을 통해 세계 각지의 여러 커먼즈를 시장화하거나 국유화하는 데 일조한 것이었다.

커먼즈라는 발화는, 다시 말해 공동의 권리와 실천, 규칙, 관행, 도덕을 부각하는 것은 개인이나 자본, 국가의 전유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공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의 규칙 및 관행을 급속히 변형시키거나, 공동으로 구축해 온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동의 도덕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전면화하기 때문이다.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논의가 대표적인 예다. 도시를 커먼즈로 보면, 도시 공간은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규정하고 생산해 온 공동의 ‘작품’이다(Lefevre, 1996; 강현수, 2009 재인용). 그래서 도시 커먼즈 논의는(도시가 커먼즈라는 발화는) 도시가 공동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공간을 상품화하고 교환가치를 증대시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도시 발전 방식, 이른바 ‘투기적 도시화’(신현방, 2017)에 대하여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하는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된다.

디지털도 무주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대표적인 공간이다. 디지털 세계는 권력을 평등하게 분배하면서 민주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 바 있으나, 디지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매개하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끌어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고유의 방식과 질서로 현실 세계를 재배열한다(이광석, 2020). 여기서 디지털 커먼즈(digital commons)에 대한 논의는 공동의 권리와 실천, 도덕을 디지털 세계에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공간이나 사물 등 물질적인 것만 커먼즈로 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생산 영역을 커먼즈로 보는 논의는 일상적인 가사 노동, 돌봄 노동 등 공동의 삶을 재생산하고 공동의 부(common-wealth)를 창출하는 영역이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인 노동력을 무상으로 재생산해 줌으로써 자본의 증식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Federici, 2011). 특히,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이 동시에 수행되는 현 시대에 돌봄 노동의 상품화와 ‘돌봄 위기’의 개인화, 저출산-고령화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돌봄 영역에 대한 커먼즈의 발화는 돌봄 문제가 개별 가족에게 맡겨두거나 국가나 시장 안에서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이다(백영경, 2017).

이 외에도 교육, 의료, 에너지, 먹거리, 교통-도로, 주택, 상업, 금융, 대기-기후, 바다, 산림, 바람, 물 등을 둘러싼 커먼즈의 발화들은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누가 그 이익을 향유하고 누구는 배제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커먼즈의 발화는 공동의 것으로 인식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공동의 것으로 되돌려 사유하게끔 해준다.

그러나 커먼즈의 발화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커먼즈의 발화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사회적 과정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 산림을 커먼즈로 선언했던 중세 영국의 '산림 헌장(Magna Charta de Foresta)'은 중요한 예이다. 대헌장(The Magna Carta Manifesto)의 짝 문서였던 산림 헌장은 일반 사람들이 생계자급에 필수적인 것을 산림에서 취할 수 있도록 산림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서였다. 수 세기 동안 산림은 공동의 것으로서 여겨졌고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18세기 봉건제를 타파하는 시민 혁명,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헌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산림 헌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대헌장은 왕권 제한과 법치 확립의 근거로서 사유재산 제도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기에 적절했던 반면, 공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산림 헌장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인보우, 2012).

대헌장과 산림 헌장이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과정은 커먼즈의 발화가 언제 어느 지점에 서 무엇에 의해 용인되는지와 관련된 정치적 과정을 보여준다. 커먼즈의 발화를 둘러싼 정치는 '무엇이 공동의 것이라고(이어야 한다고) 믿는가'에 대한 정치다.

2) 누구의 커먼즈?

종종 커먼즈는 이미 거기에 있는, 혹은 주어진 것으로 오인된다. 하지만 커먼즈는 그것을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집합적인 과정 없이 성립하기 어렵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접근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규칙 및 관행 등의 실천 없이 공동의 것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다. 커머닝(commoning)은 이렇게 집합적 소유 관계, 다시 말해 무언가를 공동으로 이용·접근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공동의 규칙·관행을 생산·공유하는 관계)에 기반한 집합적인 실천을 총칭하는 말이다. 커머닝 없는 커먼즈는 없기 때문에(볼리어, 2015) 커머닝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커머닝은 커먼즈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지만, 커먼즈가 특정 사물이 아니라 집합적인 활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라인보우를 비롯한 많은 커먼즈 논자들이 '커머닝'을 복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커먼즈, 즉 공동의 것에 대한 집합적 소유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은 누구인가? 커먼즈에서 지시하는 공동체 혹은 집단의 범주는 오래된 논의거리다. 세계 각지의 공동체가 커먼즈를 어떻게 자치적으로 이용·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계가 분명한 소규모 공동체의 커먼즈를 다루었다(McCay & Acheson, 1987; Ostrom et al., 2002; 아키미치, 2007). 이 연구들은 어촌, 산지촌의 공동체가 연안이나 산림에서 무엇을 공동의 것으로 여기고 공동으로 이용·관리하는 관행을 발전시켜 왔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협업 규칙, 소유, 증여, 분배 제도, 입회(入會), 감시, 처벌, 분쟁 해결 제도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국가나 지구처럼 더 큰 규모 집단에 초점을 둘 경우, 커먼즈는 일부 공동체 구성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 더 넓게는 모든 생명체의 것이다. 기후·대기, 바람, 하천, 해양 등 여러 공동체에 걸쳐있는 커먼즈, 사회 인프라(도로·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등) 및 제도(교육, 의료, 금융, 사법, 행정 등)와 같은 커먼즈 논의들은 대체로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고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큰 규모 공동체의 커먼즈를 다루고 있다(우자와, 2008).

장훈교(2019)는 공동의 것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도시나 국가 혹은 더 큰 규모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커뮤니티 커먼즈(community commons)와

퍼블릭 커먼즈(public commons)로 구분한다. 커뮤니티 커먼즈는 전체 시민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이 이용·관리하며 일차적으로 공동체에 귀속되는 커먼즈이고, 퍼블릭 커먼즈는 모든 시민의 필요에 따라 평등한 접근과 이용이 전제되고 (국가가 공급하더라도) 모든 시민에 귀속되는 커먼즈이다.

이러한 커뮤니티/퍼블릭 커먼즈의 구분은 상호배타적인 구분이 아니라, 커먼즈가 담지하고 있는 서로 다른 차원에 대한 분석적 구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커먼즈는 경계를 가진 '우리'의 것인 차원과, 경계가 불분명한 '모두'의 것인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윤여일, 2020; 정영신, 2020). 예를 들어, 열대우림은 세대를 걸쳐 모든 인류의 필요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모두의 것'인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열대우림에 접근하고 이용하면서 공동의 삶의 방식을 구축해 온 공동체에게, 또 열대우림을 영토 내에 포함하는 국가에게는 '우리의 것'이다. 세계은행이 열대우림을 보호 구역으로 선언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선주민을 이동시킨 것은 '모두의 것'을 앞세우는 한편 '우리의 것'으로서 커먼즈는 배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두 차원의 커먼즈가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2). 여러 공동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다를 공동 이용해 온 측면이 있는 한편, 공유수면처럼 공동체들의 이용 방식을 조율해야 하는 공동의 영역도 있다. 이에 더해 바다는 특정 공동체, 지역, 국가, 세대에 귀속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것으로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 2. 커먼즈의 중층성(아키미치, 2007 재구성)

커먼즈의 차원		(예)바다 커먼즈의 중층성		
모두	↑ 퍼블릭/글로벌 커먼즈	공해		
↓ 우리		공유수면		...
	↓ 커뮤니티 커먼즈	공동체A	공동체B	...

'누구의 커먼즈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우리'와 '모두' 사이에서 긴장하고 충돌하며 경계를 긋는 정치적 작업이다. 이는 커먼즈가 어떻게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커먼즈를 통해 어떻게 공동의 부를 쌓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공동의 필요와 부를 논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커먼즈 논의나 운동이 마주하는 정치적 쟁점의 상당수는 이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3. 나가며

이 글은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전환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로 이해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는 과정 내지 전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전환의 목표이든 과정이든 거기에 내재된 정치를 보지 않고서는 전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전환을 정치로 보는 관점은 전환의 목표 설정과 전환에 관여하고 전환 과정을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권력의 작동, 상징 투쟁을 드러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여 모두가 합의 가능한 전환의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다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을 통해 질서정연하게 전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환상을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전환 정치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사유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전환 정치 일환으로서 커먼즈의 정치를 살펴보았다. 커먼즈는 ‘공동의 것’이란 의미로, 많은 커먼즈 논의들은 커먼즈가 중심이 되거나 커먼즈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 전략(커먼즈가 좌초되는 요인 분석 및 극복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커먼즈에 뿌리내린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은 공동의 기본적인 필요나 생존에 필수적인 것, 공생하고 공동의 부를 늘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문제에 주목하게 하므로 유용하다. 하지만 전환 정치가 시사하듯이, 누구의 기준에서 커먼즈를 규정하는지, 무엇을 커먼즈로 이야기하고 유지할 것인지 선택배제하는 과정은 정치적이며, 어떤 공간과 규모에서, 누구의 정의와 규범에서 더 건전한 커먼즈 기반 시스템을 구상하는지에 정치가 존재한다.

전환 논의는 넓게 보면 공동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온 시스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삶의 유지하기 위해 현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논의이다. 공동의 부와 공동의 권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커먼즈의 정치를 보다 면밀하게 탐색할 때 전환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한층 풍부해 지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42-90.

구도완, 박순열, 김민재, 김지혜, 안새롬. 2017.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서울시 정책 평가.” 서울연구원 보고서.

김민재, 박순열, 김지혜, 안새롬, 구도완. 2018.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7-40.

김지혜. 2019. “낭만과 기계 너머의 강: 4대강 프로젝트와 녹조의 생명정치.” 『문화역사지리』. 31(30), 25-40.

라인보우(Linebaugh, P).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정남영 역. 갈무리.

레이워스(Raworth, K.). 2018. 『도넛 경제학』. 홍기빈 역. 학교재.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111-143.

볼리어(Bollier, D.).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역. 갈무리.

솔론(Solon, P.), 아키통(Aguiton, C.), 아잠(Azam, G.), 벨트란(Beltran, E. P.). 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비비르 비엔, 탈성장, 커먼즈, 생태여성주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 탈세계화, 상호보완성』. 김신양, 허남혁, 김현우 역. 착한책가게.

신현방. 2017.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희망의 도시』. 한울, 216-243.

윤여일. 2020. “커먼즈의 혼란 속 방향 찾기 위한 대화.” 2020 커먼즈네트워크 자료집.

이광석. 2020.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101, 50-78.

장훈교. 2019.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뭇잎스.

정영신. 2020.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미발간).

카프라(Capra, F.), 마테이(Mattei, U.). 2019.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박태현, 김영준 역.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아키미치(秋道智弥). 2007.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공유에 관한 역사·생태인류학적 연구』. 이선애 역. 새로운사람들.

플라니(Polanyi, K.).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홍기빈 역. 길.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16.

Brook, B. W., Alonso, A., Meneley, D. A., Misak, J., Bles, T., & van Erp, J. B. 2014. “Why nuclear energy is sustainable and has to be part of the energy mix.” Sustainable Materials and Technologies, 1, 8-16.

Coenen, L., Benneworth, P. & Truffer, B. 2011. “Towards a spatial perspective on sustainability transitions.” Research Policy, 41(6), 968-979.

Federici, S. 2011.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 Commoner. 1-14.

Geels, F. W. 2002. “Technological transitions as evolutionary reconfiguration processes. A multi-level perspective and a case-study.” Res. Policy 31(8-9), 1257-1274.

Kemp, R., Schot, J., & Hoogma, R. 1998. “Regime shifts to sustainability through processes of niche formation. The approach of strategic niche management.” Technol. Anal. Strateg. Manag. 10(2), 175-198.



- Rip, A., & Kemp, R. 1998. "Technological changes." In Rayner, S., Malone, E. L. (Eds.), *Human Choice and Climate Change 2*. Battelle Press, Columbus, Ohio, 327–399.
- Rotmans, J., Kemp, R., & Van Asselt, M. 2001. "More evolution than revolution: transition management in public policy." *Foresight: The journal of future studies, strategic thinking and policy*, 3(1), 15–31.
- Schot, J., & Geels, F. W. 2008. "Strategic niche management and sustainable innovation journeys. Theory, findings, research agenda, and policy." *Technol. Anal. Strateg. Manag.* 20(5), 537–554.
- Shove, E., & Walker, G. 2007. "CAUTION! Transitions ahead: politics, practice, and sustainable transition manage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4), 763–770.
- Shove, E., & Walker, G. 2010. "Governing transitions in the sustainability of everyday life." *Research policy*, 39(4), 471–476.
- Shove, E., & Walker, G. 2014. "Transnational Transitions: The Diffusion and Integration of Mechanical Cooling." *Urban Studies*, 51(7), 1506–1519.
- Smith, A., & Stirling, A. 2010. "The politics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 and sustainable socio-technical transitions." *Ecology and Society*, 15(1).
- Smith, A., Vos, J., & Grin, J. 2010. "Innovation studies and sustainability transitions. The allure of the multi-level perspective and its challenges." *Res. Policy* 39(4), 435–448.
- Swyngedouw, E. 2010. "Impossible sustainability and the Post-political condition." In Cerreta, M., Concilio, G., Monno, V. (Eds.). *Making Strategies in Spatial Planning. Knowledge and Values*. Springer, 185–205.
- Swyngedouw, E. 2013. "The non-politic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ACME: Int. J. Crit. Geogr.* 12(1), 1–8.
- Markard, J. 2017. "Sustainability Transitions: Introduction to newcomer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Transition Conference, Gothenburg, June 18, 2017*.
- Meadowcroft, J. 2007. "Who is in charge her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complex world."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9(3–4), 299–314.
- Meadowcroft, J. 2009. "What about the politics?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ition management, and long term energy transitions." *Policy sciences*, 42(4), 323.
- Kern, F. 2015. "Engaging with the politics, agency and structure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approach."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 16, 67–69.
- Köhler, J. et al. 2019. "An agenda for sustainability transitions research: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31, 1–32.
- Voß, J. P., Bauknecht, D., & Kemp, R. (Eds.). 2006. *Reflex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dward Elgar Publishing.
- Voß, J. P., Newig, J., Kastens, B., Monstadt, J., & Nölting, B. 2007. "St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typology of problems and strategies with respect to ambivalence, uncertainty and distributed power."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9(3–4), 193–212.
- Walker, G. & Shove, E. 2007. "Ambivalence, sustainability and the governance of

- socio-technical transi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9(3–4): 213–225.
- World Nuclear Association. 2020, "Nuclear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energy-and-the-environment/nuclear-energy-and-sustainable-development.aspx>(Updated April 2020).

전환과 감정: 사용후핵연료의 정동정치

김수진 |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전환과 감정: 사용후핵연료의 정동정치

김수진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1. 전환: 거시적 조망과 미시적 관찰

1) 전환을 위한 정치적 감정에 대한 조망: 공감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경제체제의 근원적 ‘전환(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을 추동하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할까? ‘전환’ 담론은 기존의 사회경제체제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윤리적 가치판단에 기초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은 감정이 전제되어야 발현될 수 있다. 감정은 인지적 판단과 가치판단의 사고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감정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운동을 동원하는 주된 자원이다. 합리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사회운동은 추동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공동체를 감정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담론과 감정적 고양의 필요하다(신진숙 2018). 이런 이유로 누스바움은 정치적 이상이 특정한 감정들에 의해 지탱된다고 말한다(누스바움 2019: 188)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생태위기는 우리의 윤리 지평을 시공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책임의식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 또는 공감에서 출발한다. 기후 변화는 이 타인의 지평을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 생물과 더 나아가 생태계로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누스바움은 공정한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감정이 공감이며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 이러한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강조한다(누스바움 2013; 2019).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은 누스바움이 말한 ‘특정한 곤경에 대해 예민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한 방법이다(누스바움 2019: 218).

리프킨(2010)은 인류세 담론에 걸맞게 거시적이고 통시적 차원에서 공감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문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구적 차원의 공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리프킨은 상호 연관성이 증가하는 세계화된 사회는 에너지 집약적이고 엔트로피가 증대한 사회 이면서 동시에 공감의 영역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 지구적 생태위기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대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 확대되고 있다. 리프킨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비인간 생물종, 생태계 등으로 공감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불과 몇 십 년 만에 서구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탈물질주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리프킨은 합리성, 실용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의식에서 개인의 참여, 정서적 일체감, 공감적 확대에 기초한 생물권 의식으로 전환하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누스바움은 공적 감정인 공감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고 강조한다. 가령 세금 제도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약자 보호와 불평등 해소라는 대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감정이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고 말한다. “우선 법과 제도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감정은 이를 유지하고 지탱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한 개선의 동기가 작용할 때, 우리는 제도 자체가 감정의 통찰을 구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실제 삶에서의 공감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면서 특별한 형태의 청원으로 기울지 않는 방식으로 공감을 구현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미 선한 감정들의 통찰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 그런 감정들의 경험을 더욱 촉진한다.”(누스바움 2019: 219). 즉, 연민, 공감과 같은 선한 감정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이러한 감정을 구현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 능력이 확대된다. 가령 복지제도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쉽게 공감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제도가 발달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이 경제적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을 더 잘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위의 책: 219). 이런 이유로 우리의 공감 능력이 확대되는 정도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위의 책: 190).

리프킨의 해법도 누스바움과 다르지 않다. 리프킨은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공적 자본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면, 공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구축된다.

누스바움과 리프킨 모두 공감이라는 감정에 실천적 차원의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에 기초해서 타인의 의견을 판단한다(스미스 2009). 타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정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동정(sympathy)이다.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감정은 행위를 야기하는 원인 또는 동기와 그 행위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행위가 발생시키고자 하는 효과에 근거한다(스미스 2009: 22).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공감과 동정은 정서적 공통점을 갖지만 공감은 동정보다 실천의 측면에서 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공감(empathy)은 미학에서 사용하는 독일어 용어 ‘Einfühlung’을 영어로 번역한 단어이다. Einfühlung은 감정이입을 뜻하며 예술작품에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공감에는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실천적 반응이 뒤따른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정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촉발되고, 현재 그들의 조건을 따져 본 후,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적 반응과 실천적 반응이 뒤따르는 것이 공감이다.”(리프킨 2010: 21). 누스바움은 감정이입의 공감 능력을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이 처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누스바움 2019: 235). 이것은 단순히 타인의 사정을 아는 수준이나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해보는 차원을 넘어선다. 감정이입은 더 적극적 차원의 실천과 연관되는데, 바로 ‘나와 다른 타인’의 곤경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위의 책: 235). 누스바움은 “고통을 평가하는 인간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다른 존재의 곤경을 상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위의 책: 236). 이런 차원에서 “감정이입은 그 자체로 도덕적 의미를 내포한다. 말하자면 내 경험의 중심에 타인에 대한 인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위의 책: 236). 누스바움이 타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으로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면, 리프킨은 느낌과 감정의 차원을 넘어 경험과 소통의 차원으로서 공감을 강조한다. “공감에는 너와 나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존재의 정체성을 합치고 공통의 정신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공감은 “감정적이면서도 인지적 체험이다”(리프킨 2010: 217). 공감 의식을 확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며, 자아는 공동체

의 일에 참여하고 관여함으로써 확장된다. 실제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낀다’. 반대로 타인의 “고통이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실감 나지 않는 경우 공감적 고통은 촉발되지 않는다”(위의 책: 155). 반핵운동, 환경운동, 소수자 운동, 빈민운동, 노동운동 등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저항 운동은 타인의 고통을 직간접으로 경험하게 만들으로써 공감을 추동한다. 시민사회에서 이 공감이 확대할수록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노멀(Normal)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노멀이 다시 시민사회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공감 능력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될수록 공동체에 더 많이 참여한다.

2) ‘불행한 가정’의 미시적 관찰: 딜레마 상황

누스바움과 리프킨의 공감에 대한 논의는 마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문구인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톨스토이 2009 :11)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재현한 것과 같다.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규범적이고 지향점이 분명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의 당위와 미시적 차원의 존재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거대 담론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공적 감정인 공감 능력은 멀리서 조망하는 규범적 차원의 지향점 또는 ‘행복한 가정’의 고만고만한 공통된 이유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들여다보면 종종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손쉬운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 펼쳐지고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딜레마 상황의 이유는 ‘불행한 가정’의 나름나름의 이유만큼이나 제각각이다. 그리고 딜레마 상황과 불편한 진실은 종종 재현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다. 한 사회가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도달할 때까지 잠재된 채 ‘분위기’를 형성할 뿐이다.

공감은 “다르다고 인정된 타자와의 정동적 관계나 화합 또는 유대의 측면”이다(프로빈 2015: 153). 스피노자는 ‘정동하고(affect) 정동되는(affected) 힘’으로 정동을 정의한다. 정동은 다른 신체와의 마주침을 통해 발생한다. 정동은 신체적 감응이다. 이 신체적 감응은 ‘슬프다’, ‘기쁘다’ 등으로 주관적인 감정적 표현을 동반하지만 본질적으로 초개체적(transindividual)이다. 다른 신체들이나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잠재력으로 존재의 역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존재의 역량은 반드시 관계적이다. 타자와의 정동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감 능력에 토대를 둔 감정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는다. 정동정치는 “정체성의 정치가 아니라 어울림(관계)의 정치”이다(마수미 2018: 45). 이 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정동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시민사회의 공적 감정 동원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살펴본다.

3) 핵폐기물의 불편한 진실

올리히 벡은 위험사회는 두려움을 공유하는 불안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비가시적 위험 또는 가상적(hypothetical)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위험사회의 사례로 핵발전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 이슈는 현대사회의 대표적 갈등 분야 중 하나이다. 핵발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종종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거시적 이분법 속에서 감정 공동체를 구분한다. 핵발전을 현대사회의 가장 논쟁적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핵발전소에서 핵연료를 태운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련된다.



핵폐기물 처분은 딜레마 상황에 가깝다. 핵폐기물은 핵발전보다 그 존재나 위험이 더 비가시적이다. 핵발전이 전기 또는 편익을 생산한다면 핵폐기물은 사후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 핵발전은 경제 논리에 따라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핵폐기물은 성장의 부차적 생산물로 그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기제가 작용한다. 핵발전소의 운영은 구체적 기간으로 규정되지만, 핵폐기물의 저장 기간은 인류가 책임질 수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핵폐기물 처리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고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정치 논쟁의 주변부로 밀려나며 비가시적 존재로 치부될 운명에 처한다. 핵폐기물은, 울리히 벡의 표현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위험사회의 양상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¹⁾

핵폐기물은 핵발전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전기를 생산하고 이 에너지는 우리의 경제적 삶에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긍정적 이미지도 핵폐기물의 부정적 이미지를 쉽게 상쇄시키지 못한다. 일반인들의 핵폐기물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과학자나 공학자들의 확신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핵폐기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핵폭탄의 파괴적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우리의 사회, 문화적 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 핵공학계, 핵산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는 핵폐기물 처분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Slovic et al, 1991).

한국에서도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적 운영을 시작한 이래 40년이 지났고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앞두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처분 문제는 여전히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불편한 진실과 딜레마 상황은 핵발전소 건설 이슈처럼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거시적 이분법의 틀에서 재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진숙(2019) 표현대로, 언어로 재현되지 않는다고 비담론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본질적 차원일 수 있다.

2. 정동과 위험인식

정동(情動)은 영어 단어 affect를 번역한 용어로 유사한 개념으로는 감정(emotion), 정서(affection), 느낌(feeling) 등이 있다. 학자나 저서에 따라 감정, 정서, 정동을 비슷한 개념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정동은 스피노자 「에티카」의 affectus에서 비롯하여 다양한 철학적 사유로 발전한다.²⁾ 이 글에서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용어인 감정이나 정서보다 감정이나 정서의 특성인 변화, 이행, 또는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정동이라고 표현한다. 사라 아메드(Ahmed 2004)는 정동이 자본(capital)처럼 순환하면서 그 가치가 증식된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여 정동적 경제(affective economy)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표현도 정동의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감정이나 정서가 사회, 정치적 파급되는 속성을 지닌다는 차원에서 정동정치라고 표현하며, 사라 아메드의 정동적 소외라는 개념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정동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동의 이러한 역동적 특성은 애초에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동(affectus)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정의한 것에서 출발한다(스피노자 2010: 153). 이 변용은 자신의 신체와 다른 신체의

1) 김수진 출판예정원고 '사용후핵연료의 '검은 코끼리' 신드롬'에서 인용
2) 서광사에서 번역 출판된 「에티카」에서는 affectus를 정서로 번역했다.

마주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마주침을 통해 신체의 변용이 일어나고 '신체의 변용의 질서와 연결'에 따라 '관념의 어떤 연결'도 만들어지는데, 스피노자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말한다. 기억은 마주침의 역사이며, 이것은 신체 변용의 관념으로 형성된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지성적 관념의 연결'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신체의 변용에 따라 형성된 관념을 말한다. 지성적 관념의 연결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지만 신체 변용의 관념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령, 모래에 새겨진 말의 발자국을 군인이 보게 되면 말을 탄 기사에서 전쟁으로 사유가 이어지고, 이 발자국을 농부가 보게 되면 쟁기와 논밭의 사유로 이어진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사물의 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연결하도록 습관화된 것에 의해서 하나의 사유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스피노자 2010: 110).”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다른 마주침의 경험은 다른 기억의 연쇄로 이어지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선호, 태도 인상을 형성한다. Zajonc (1980)는 선호, 태도, 인상 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동적 판단이 인지적 판단보다 앞선다고 강조하며, 모든 사회적 현상은 정동과 연루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사회적 교류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정동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대화는 각자의 견해, 선호, 평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정동은 언어나 비언어적 신호로 전달된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친구다' 또는 '당신은 적이다'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것 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애정이 담긴 말인지 아니면 경멸이 담긴 말인지를 아는 것이다. 느낌과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든 인식은 어느 정도 정동적 요소를 내포한다. 느낌과 사유는 분리되지 않는다. 느낌은 인지과정의 어느 순간에서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정동은 사유의 동반자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 음악 등을 떠올릴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느낌이다. 즉,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정동적 반응이다. 처음 일어나는 정동적 반응은 다소 모호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사유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인지 판단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정동적 판단은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때, 정동은 일종의 정신의 지름길처럼 작용한다. Slovic et al (2009)은 이러한 정동의 특징을 정동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라고 표현한다.³⁾

이러한 정동 휴리스틱은 일반인이 리스크를 평가할 때 적용된다. Slovic et al (2009)는 리스크와 편익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리스크와 편익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리스크가 크면 편익은 낮게 평가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이나 기술을 평가할 때 그 활동이나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느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의 긍정적 강도와 부정적 강도에 따라 리스크(위험)와 편익이 다르게 평가된다. 어떤 활동이나 기술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면 그 활동이나 기술은 위험이 낮고 편익이 크다고 평가한다. 호의적이지 않으면 그 반대다. 정동은 단순히 분석적 평가 이전에 나타나는 일차적 반응이 아니라 이후의 리스크와 편익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Zajonc (1980)에 따르면, 이러한 정동적 판단은 쉽게 변하지 않고 완고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호에 대해 틀릴 수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정동적 판단은 되돌이킬 수 없다. 또 정동적 판단은 우리 자신과 연관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 자체보다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태도나 선호, 정동적 판단은 정보에 의해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핵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우리의 정동적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정동적 이미지가 다시 우

3) 휴리스틱(heuristic)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렵짐작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리의 세계관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Peter & Slovic, 1996).

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정동정치

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경과⁴⁾

1978년 첫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운영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수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에 실패했다.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주민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이 지역 외에도 후보지로 거론된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주민들은 처분장 건설에 반대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포기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2005년 경주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해서는 십수 년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공론화의 단초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에 처리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2007년~2008년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에서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의 공론화 원칙 등 공론화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200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6조 2항에 공론화를 규정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마련”했다.⁵⁾ 법에 명시된 공론화 절차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설치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보고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제출된다.

2011년 11월~2012년 8월에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론화의 목적과 대상, 방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임시저장을 중간저장을 준비하는 단계로 간주하고, 중간저장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규제 기준을 법제화하고 저장기간과 절차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부지선정 절차와 보상 및 지원제도도 공론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시했다.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개월 동안 활동 후 2015년 6월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때 시민대표 3명 중 2명이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로 지적하며 불참했으며, 이후 공론화 결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공론화 결과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처분장 건설 로드맵(2020년까지 처분장 부지 선정, 해당 부지에 지하연구소(URL) 건설, 필요한 경우 이 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마련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 2051년 영구처분장 건설)을 제시하며, 영구처분장이 건설되기까지 필요한 경우 임시 저장소를 ‘단기 저장소’로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4) 공론화위원회의 조성경 위원의 발표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논의과정과 전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숙의자료집」, 탈핵신문 등 참고
5) <http://www.law.go.kr/법령/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개정 이유>

하다고 명시했다. 결국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결과 보고서는 단지 임시 저장소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고,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다시 재공론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전 공론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8년 5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먼저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2018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재검토 의제와 위원회 구성에 대해 검토했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이해관계자를 모두 배제하고 이른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회는 전 국민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배제되면서 반핵시민단체는 공론화 참가를 거부했다.

토론회나 숙의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참여를 보이 못했다. 재검토위원장이 2020년 6월 사퇴했다. 위원장 사퇴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었고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로 경주지역의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조사가 진행되었다. 핵발전소가 소재한 다섯 개 지역에서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경주지역만 실행기구가 구성된 채 공론조사가 진행되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 내에 위치하는 울산 북구는 맥스터 증설의 공론조사에서 배제되면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울산 북구 유권자의 28.82%(5만 479명)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자 가운데 94.8%가 맥스터 증설에 반대했다. 지역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경주지역에서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 81.4%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결과를 두고 공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2020년 8월 현재 제기되고 있다. 공론조사가 있기 보름 전에 양남면 주민 여론조사에서 55.8%가 맥스터 증설을 반대했으나 시민참여단에 참여한 양남면 주민 39명 중 1명(2.6%)만 반대한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애초 찬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문제와 더불어 지역시민 설문조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개입하는 등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안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더욱 중요해진다.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담보하는 제도로 공론화가 도입된 이유이다. 하지만 2004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십수 년째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사용후핵연료 이슈의 정동적 소외

사라 아메드는 행복은 정동, 지향성, 평가나 판단과 관련된다고 말한다(아메드 2015). 행복은 어떤 대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해 정동되고(affected),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을 향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지향성을 지닌다. 또 어떤 대상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 대상을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행복은 평가나 판단과 관련된다. 이렇게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상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약속으로 기능하며, 그렇게 해서 그 대상들이 사회적 선(social goods)으로 순환한다(아메드 2015: 57).” 아래에 기술된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사회적 선’으로 간주된다.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보를 제한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해갈지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함께 숙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공론화 과정’입니다... 고준위 핵폐기장의 주민수용성은 경제적 보상이라는 유인책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2020: 39)

재공론화의 「숙의자료집」에도,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에게 ‘열린 마음으로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제로 묘사되어 있다. 재검토위원회와 반핵시민단체 모두 공론화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공론화는 그 ‘행복’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3~2015년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 타운홀미팅, 포럼,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공론조사, 심층인터뷰, 회의, 온라인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 국민, 그리고 핵발전소 소재 주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여기에 2만 7천여 명이 의견을 나누고 온라인을 통해 35만여 명이 의견을 제시했다.⁶⁾ 하지만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다.⁷⁾ 그리고 재공론화 위원회는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과정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는 그 취지와 달리 절차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론화 진행에 대한 절차는 쉽게 합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차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절차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아메드가 “우리가 방으로 걸어가며 그 분위기를 느낄 것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도착하는 각도에 달려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처럼, 침예하게 대답하는 찬반 입장이 공론화라는 협의의 ‘방’에 들어설 때 이미 서로 다른 ‘각도’로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협의의 방에 도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주장되는 절차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한 절차를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서 누적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전까지, 이해당사자가 공론화를 위한 협의의 방에 들어서는 각도는 언제나 어긋날 수밖에 없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와 별개로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폐기물 처분장은 핵발전소 건설처럼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간단히 반대할 수 없다. NIMBY는 반대의 도덕적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으로 절차가 쉽게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결정한 이후 이 공론화는 공론(公論)을 특정한 틀 속에서 재현하는 모델로 이해되었다. 공론조사,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2015.6.29.)

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숙의자료집」, p.7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통상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전국 의제는 발전소지역의 지역 의제와 달리 매우 포괄적인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거의 모든 내용과 쟁점 사항을 망라한다.

전국의제 관련 종합토론 내용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역 의제인 건식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 여론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각각의 의제에 실린 정동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의제는 임시저장시설의 안전문제와 재처리 등 논쟁이 될 수 있는 의제가 빠지면서 사실상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⁸⁾

〈표 1〉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전국의제

전국의제	의견 수렴 내용
1.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 관련 사항	①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영구처분시설이 필요한가요?
	②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한가요?
	③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2.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기존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관리원칙은 수정이 필요한가요? 또한, 의사결정의 가역성, 폐기물 회수가능성을 관리원칙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3.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결정을 위한 기존의 정책 결정 체계(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4.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5.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설치·운영지역에 대한 지원원칙과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의자료집에는 〈표 1〉에 나타난 세부 의제별로 쟁점 사항과 국외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부록에는 전문가 의견, 한국의 원자력 운영 및 사용후핵연료 현황과, 지하연구소(URL) 등 기술적 사항, 국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의사결정체계 사례 등이 실려 있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의 발표와 자료집의 정보를 통해 학습하며 2차례 종합토론을 거친다. 그리고 세부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재검토위원회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의제와 달리 단기간에 숙의해야 할 의제의 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좋고 나쁨, 또는 찬반의 정동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선택처럼 정동의 강도는 강하지 않다. 의

8) 한국경제. “[시론]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부가 결단 내려야” (2020. 08. 09).



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먼 주제라는 특징을 보인다. 정보의 학습으로 단기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정동적 반응보다는 인지적 반응을 따른다. 이러한 전국의제는 시민사회에 어떠한 ‘신체적 감응’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이슈가 공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공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립’이라는 기계적 틀이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 조사통계 분야별로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중립은, 원자력 분야에 이해관계가 없고 비전문가이지만 공론화 절차만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이해관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 받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마찬가지로 공론화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강조는 정쟁화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한국사회의 정동적 분위기를 재현한다. 분위기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실재하는 현상이며, 주관적 감정과 느낌이 발생하는 공유된 토대이다(Anderson 2009). 한국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며 ‘정치화’된다는 것은 자주 부정의 의미로 읽힌다.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월성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재검토위원회는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갈등이 커진 상황을 우려”하여 “지난 5월 부산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에서 통보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지역실험기구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했다.⁹⁾ 정당은 갈등 사안에 대해 특정 입장을 대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두고 다른 정당과 경쟁한다. 사회적 갈등사안은 정당정치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공론을 형성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치권을 통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회피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한시적인 임시 기구인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정치의 역할을 제거하고 정치적 책임도 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적 논쟁에서 멀어질수록,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절차에만 매달릴수록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정치와 행정의 책임은 회피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라는 틀이 사용후핵연료 이슈를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이로써 ‘공론’도 소멸한다. 연극무대에서처럼 일회적으로 상연되는 공론화는 시민사회를 관중으로 만들고 정동적 연대를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기계적 중립에 매몰된 형식적 공론화는 마주침을 통한 정동화 과정을 없애 버린다. 이로써 핵발전소 지역의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정동적 사건은 사회 전반의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또는 ‘행복’을 약속했던 ‘공론화’는 역설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이슈 자체를 ‘공론’에서 소외시킨다. 사회적 선으로 간주한 공론화에서 오히려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정동적 소외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안전 이슈의 정동적 소외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이나 안전 이슈는 모순적이면서 역설적이다.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위험하지만, 핵발전소 반대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반대에 연계된 정동의 강도가 훨씬 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반대운동은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으나 이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정동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위험보다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이

9) 전자신문,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착공 못한 채 ‘발 동동’”, 2020. 8. 26. (<https://m.etnews.com/20200826000124>)

른바 경제논리가 더 우세했다. 이런 사정은 한국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은 지금까지 실패했다. 수십만 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재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핵폐기물에 대한 일차적이며 주된 반응이 합리적 분석에 따른 인지적 반응이 아니라 정동적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폐기물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보다는 핵폐기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우선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해야 하는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저장소를 건설한다고 주장하고 반핵시민단체는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장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안전이나 위험은 이 레토릭 안에서만 유효하다. 임시저장소, 단기저장소, 필수 냉각시설,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그 무엇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소를 지칭하든 사용후핵연료라는 물질의 실체는 동일하다. 방사성 붕괴열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간저장에 적용하겠다는 엄격한 안전 논리는 임시저장 상태에 놓여 있는 저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논리적으로 합당하지만 실제로 임시저장소는 말 그대로 ‘임시적’ 상태에 놓여 있다. 독일은 2000년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에서 핵발전소 폐쇄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시켰다. 이로써 각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건설했는데 이 저장소는 중간저장소와 동일한 안전 규칙이 적용된다. 2001년 9.11 테러이후에는 외부의 인위적 항공기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건설되는 사용후핵연료 시설에 대해 외부의 인위적 항공기 공격에 대비하도록 설계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임시저장소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호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중간저장소는 가능한 ‘건식저장’이 안전하다고 법에 규정하지만 고리, 울진, 영광 핵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소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¹⁰⁾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안전 공학의 원칙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¹¹⁾ 안전 공학의 원칙에 따르면, 첫째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둘째 예상되는 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장치를 설계하며, 셋째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절차적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사용후핵연료를 조밀하게 습식 저장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배제한다는 첫째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테러 행위처럼 의도적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설비를 갖추지 않음으로써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안전보장 설비가 없다. 이로써 둘째와 셋째 안전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이전에 완공되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에 대해서는 다만 사고 완화전략 수립이라는 절차적 안전조치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위험과 불확실성 감소라는 안전 원칙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서 안전은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밀 저장 방식이 냉각기능 손실로 인한 사고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방사능 누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다. 전 국민적 관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었다. 오히려 백은 위험을 드러내고 논쟁하는 것이 위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안전조치가 강화되지 않은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상태가 유지된 것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의 안전 이슈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4조에는 중간저장시설은 “가능한 피동형 설비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11) 출판 예정인 김수진 “사용후핵연료의 ‘검은 코끼리’ 신드롬” 인용



반핵시민단체도 안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반핵단체인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에서 발행한 「핵연료폐기물 Q&A 21 자료집.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폐기물!」에는 핵폐기물 저장방식 중 안전한 것은 없으며, 습식이든 건식이든 모두 위험하다고 말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건식저장시설이라는 불안전하고 합의되지 않은 핵시설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멈추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반핵단체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안전한 저장설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이 요구는 핵발전소를 멈추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밀려난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운동의 전략에서 안전 문제는 모호하게 미끄러진다. 위험하다면 안전설비를 보강한 저장소를 건설하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저장설비 추가 건설을 막는 데 더 집중한다. 지역주민도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안전한 저장설비 건설은 언급하지 않는다. 안전한 저장설비가 장기적으로 최중저분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설비 증설을 반대하지만 이유와 결론은 엇나간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반대의 딜레마상황이 놓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가 불러일으키는 정동은 역설적이게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기 힘든 대상으로 만든다. 반핵단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현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정부가 임시저장소를 당장 증설하지 않으면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이슈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전 이슈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일회적 공론화라는 기계적 틀에 가두어 정치권의 참여와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써 시민사회가 사용후핵연료 이슈와의 마주침을 차단한다. 안전 문제는 수사적 표현으로만 등장할 뿐 실천적 의미를 지닌 전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주장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긋나면서 안전 이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서 재현되지 않고 미끄러진다.

4. 글을 나오며

핵폐기물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핵폐기물 생산 주체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핵폐기물은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지역 간 공평하게 분배하여 저장할 수 없다. 이렇게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기 힘든 분야이므로 절차적 정의가 더욱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누구나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질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지역에 핵폐기물은 처분되어야 한다. 반핵단체와 정부 모두 공론화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규범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이 절차는 생각만큼 매끄럽게 실현되지 않는다. 핵폐기물 처분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공론화를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불편한 진실과 딜레마 상황으로 점철되어 있다.

위험하다는 주장과 달리 안전에 대해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책임의 주체는 불분명하고, 낙인찍기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정동적 반응과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NIMBY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며, 정치적 논쟁의 부정적 분위기와 공론화의 이상화된 분위기라는 대조는 공론을 소멸시킨다. 공론화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협소하게 이해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문제에서

정치가 소외된다. 이것은 마치 공론화를 정치적 갈등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속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정치권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므로써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행정관료는 임시 기구인 위원회에 공론화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여기에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과 반핵단체의 불신은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간 이루어진 두 번의 공론화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숙의하고 토론한다는 공론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절차의 공정성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 월성 맥스터 증설에 관한 경주 지역 주민의 공론조사에 대해 재검토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울산과 경주 시민단체와 반핵단체는 정부가 ‘밀실과 졸속’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영터리 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재검토준비단에 참여하고 재공론화를 요구한 반핵시민단체는 현재 ‘공론화의 폭력’을 주장하고 있다.¹²⁾

이러한 공론화를 둘러싼 대립이 현재와 같이 팽팽하게 지속될 경우 공론화는 유명무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공론의 실패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하여 Slovic et al (1991)은 ‘신뢰의 위기 (crisis of confidence)’가 핵폐기물의 주된 문제라고 강조한다. 핵폐기물 처분에 관련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원이 투입된 것과 대조적으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정교한 정치적 과정과 제도는 이에 상응하여 발전하지 않았다(Slovic et al 1991: 1606). 현재 한국사회의 핵폐기물 처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역시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과 이를 촉진할 정치적 환경 구축이 절실히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핵폐기물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공론화가 초래한 사용후핵연료 이슈의 정동적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갈등과 정치적 논쟁을 무화시키지 않고 시민사회에 신체적 마주침과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공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기술적 문제로 간주되어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안전성 등 시민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의제들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후핵연료의 성격과 위험성을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정동적 연대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12) 탈핵신문. 2020. 8. 12. 이상홍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발언문 인용.



참고문헌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2020. 「핵연료폐기물 Q&A 21 자료집: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폐기물!」

누스바움, 마사(박용준 역). 2019. 「정치적 감정」, 글항아리.

누스바움, 마사(박용준 역). 2013. 「시적 정의」, 궁리.

리프킨, 제러미(이경남 역). 2010. 「공감의 시대」, 민음사.

마수미, 브라이언(조성훈 역). 2018. 「정동정치」, 갈무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숙의자료집」

신진숙. 2018. “환경 저항 서사와 정동적 생태학”, 「문화와 사회」, 26(1), 139-174.

신진숙. 2019.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정동적 도시론을 중심으로”, 「대한 지리학회지」, 54(2), 177-198

스미스, 애덤(박세일·민경국 공역). 2009.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스피노자, B.(강영계 역). 2010. 「에티카」, 서광사.

아메드, 사라. “행복한 대상”, 그레그, 멜리사·시그워스, 그레고리 (최성희 외 역). 2015.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56-95.

프로빈, 엘스페스. “수치의 쓰기”, 그레그, 멜리사·시그워스, 그레고리 (최성희 외 역). 2015.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갈무리, 126-159.

톨스토이, 레프(박형규 역). 2009. 「안나 카레니나1」, 문학동네.

Ahmed, Sara. 2004. “Affective Economies”, *Social Text*, 79, Vol.22, No. 2, 117-139.

Anderson, Ben. 2009. “Affective Atmosphere”, *Emotion, Space and Society*, 2, 77-81.

Peters, E. & Slovic, P. 1996. “The Role of Affect and Worldviews as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1427-1453.

Slovic, P., Flynn, J., & Layman, M. 1991. “Perceived Risk, Trust, and the Politics of Nuclear Waste”, *Science*, 254, 1603-1607

Slovic, P., Finucane, M., Peters, E., & MacGregor, D. 2009, “Risk as Feeling: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in 「The Ethics of Technological Risk」, ed. by Asveld, Lotte & Roeser, Sabine, earthscan from Routledge, 163-181.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175.

삶의 전환: 생태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

구도완 |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삶의 전환: 생태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¹⁾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1. 삶의 전환

우리는 모두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만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모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기도 아니다. 아니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꿈꾸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전환시키는 삶을 살아간다. 전환은 구조가 바뀌는 일이지만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삶의 전환, 의식과 감성의 전환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이 글은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자신과 세상을 전환해 온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전환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생태 전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또는 특징적인 운동가들의 희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실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태 전환이란 국가, 자본, 산업, 인간 중심의 사회구조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구조로 바꾸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정을 말한다.

많은 전환 연구들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를 ‘사람’이나 ‘삶’에 대한 분석 없이 정책, 물질, 제도 등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나 이 글은 누가 왜 전환을 꿈꾸고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들의 의식, 욕망, 정동에 대한 자신들의 구술을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심리적이기 때문에 표준화할 수 없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의식, 정동, 행위가 사회구조의 영향 아래 생기고 이들의 행위가 다시 소통적 실천을 통해 거대한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우연적이고 상황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전환 과정임을 우리는 개인의 삶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조의 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 인습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분노, 불안, 욕망을 중요한 타자와 소통하며 집합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식체계를 변화시킬 때 사회구조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격히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많은 경우 사후적으로 해석된다.

이 글에서는 ‘생태 전환’을 꿈꾸고 이를 위해 실천해 온 사람들의 삶의 전환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인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사회연구소 이철재, 김민재와 나는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환경, 생명, 마을, 동물, 공동체, 녹색정치 등 영역의 운동가들을 어렵게 뽑아서 이들을 만났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이 ‘전형적인’ 생태 전환 운동가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동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우리

1) 이 글은 구도완, 이철재, 김민재의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생태 운동가 구술생애사 연구의 일부이다.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 주신 구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가 판단한 운동가들을 정성을 다해 만나 보았다.

이 글의 연구관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생태 전환 운동가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둘째,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나는 생태전환의 복합적인 특징을 드러내 보겠다. 개인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대 생태전환이라는 숲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생태전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살펴본다. 이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의 단어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들의 구술자료에서 환경, 동물, 어부와 농부, 생명, 녹색정치 등의 열쇳말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생태전환의 특징을 분석한다.

2. 환경

이 절에서는 ‘환경’ 또는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 온 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살펴본다. 공해추방운동시민협의회를 창립한 서진옥, 한겨레신문에서 환경전문기자로 오래 일한 조홍섭, 아주대 교수로 있으면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장재연,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래 일한 구자상, 김혜정, 염형철, 생태지평을 창립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진섭, 환경정의를 만들고 서울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왕진 등 환경운동가들의 삶과 전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서진옥(1950년 생)은 1980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현재 대화문화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다. ‘딸 둘 낳고 알콩 달콩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여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1983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스태프로 일하게 되었고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공해 문제도 맡게 되었다. 주부들과 함께 공해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엄마들 마음으로, 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1986년에 36명이 모여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를 창립했다. 회원들은 ‘공해추방을 위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공해피해 주민들의 고발 전화도 운영했다. 이들은 1988년 경, 연탄공장 주변에 살다가 진폐증에 걸린 박길래씨 공해소송을 돕기 위한 모금 바자회도 열었다.

서진옥은 당시에 유기농산물 운동을 하던 풀무원이나 정농회 등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해왔지만, ‘유기농산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녀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1988년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공청협)와 공민협을 합쳐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을 창립하는 데 참여하며 최열과 함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공추련 창립후 청년들과 함께 일하다보니 서진옥과 공민협 사람들은 청년들과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엄마들이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우리 새끼들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학생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 ... 다국적 기업, 어찌고 저찌고 하면 우리는 뺄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운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진옥은 심한 갈등을 겪었다. 주도적인 남성 운동가들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벌이기만 하는 데 대한 불만도 매우 컸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 때가 됐나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할 기회가 생겨서 결국 1991년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서진옥의 삶을 보면 1980년대 주부들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운동이 어떻게 ‘새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개발국가가 ‘공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기하는 상황에서 서진옥은 여성 시민 교육을 통해 독립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조직하고 주부들의 환경운동조직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환경운동에서 고통을 느낀 것은 남성, 청년 중심의 급진적인 공해추방운동과 그들의 운동방식과 문화 때문이었다. ‘새끼들의 건강’과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 초점은 매우 다른 이야기다.

조홍섭(1957년생)은 서진옥이 말하는 청년, 학생들의 선배로서 공해추방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1975년에 공대에 입학한 조홍섭은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1978년, 4학년때에는 반정부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되었다. 그는 공대생으로서 공해문제를 연구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일본의 반공해운동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는 공해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억압적 구조를 풀어야 공해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중, 1984년에서 85년 사이에 스웨덴에 연수를 가서 ‘종속이론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이라는 저널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는 1980년대에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강의했었다.

“왜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늘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냐. ... 그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 사회변혁을 막는 현상유지세력은 늘 공해문제라고 하지 않고 환경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낡은 시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공해문제로 봐야한다. 이건 체제의 문제고, 노동자 농민의 문제다.”

이런 주장을 펴던 조홍섭은 유럽에서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을 ‘해명할 시간도 없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회고한다. 지금 그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으면 개인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구조의 문제와 개인적인 실천의 문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며 평생 환경운동을 해 온 장재연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역임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재연(1957년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상계 같은 잡지를 보며 지냈다. 대학에서는 대학연합 야학을 하며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가들과 교류를 했다. 그는 약학을 공부하면서 과학자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과학은 수단인데 그것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이지 그것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과학에 바탕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을 강조한다.

“운동을 왜 하나? 운동가를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인가? 환경운동은 그 지역의 어떤 주민이나 또는 자연 생태를 위해서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환경운동인가? 순수하게 주의 주장하는 것이 제일 쉬운 운동이다. ... 말 못하는 미래세대, 말 못 하는 동식물, 그



다음에 피해 주민 입장에 서야 된다.”

그는 문제를 풀려면 법을 바꾸고 기업을 바꿔야 하고 바꾸려면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흥섭과 장재연 등이 서울에서 운동을 시작할 때 부산에서 구자상도 환경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구자상(1958년생)은 대학에서 환경공학과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간사 역할도 하면서 공해추방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온산공단 조사를 갖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아름답던 이진리, 당월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700명이 넘는 해녀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막 뼈마디 쭈시고, 애들 피부병 걸리고 이런 거 막 보면 돌아버리지요. 마음에 빛이 됐지요. 온산공단.”

이 경험이 그에게 강하게 남아서 계속 부산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부산 공추련,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조직의 운동을 맡아 열심히 하던 40대 초반 나이에 어느 봄날, 자신이 ‘환경운동 깡패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반대운동만 하는 게 무슨 환경운동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면서 ‘생태주의 가치,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운동의 전형과 미래’를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생태주의 철학에 관심을 갖고, 생명사상, 동학 등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도 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이 기반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산 녹색당에 참여하여 2012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출마했고 2016년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근대를 넘어서는 정치의 틀로 녹색 정치를 꿈꾸며 지역 분산의 에너지 체제, 대안적인 생태 정치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김혜정(1963년생)은 이들보다 좀 늦게 1980년대 후반 울진에서 공해추방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어촌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여자에 대한 미신도 많고, 여자를 무시하는 어촌 마을이, 바다가 싫었다. 그녀는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남들보다 늦게 1986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고향에 내려와 극진하게 간호를 했다. 아버지 간호에 몰두하다가 김혜정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1988년에 지역의 전교협 선생님들, 방학 때 고향 내려온 대학생들과 지역의 현안인 핵발전소 문제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험한 일을 해야한다. 지역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청년들과 함께 울진반핵운동청년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가 트럭을 타고 길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다니니 엄마가 ‘집안 망신 시켜도 유분수지 사내도 아니고 기집애가 트럭을 타고 마이크를 잡고...’ 라고 야단을 치셨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녀는 서울로 쫓기듯이 올라와서 공추련에서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공추련에서 일하다 보니 핵에 대한 정보가 무궁무진해서 감격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영광에 가셔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울진에서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아이 쓸 데 없는 이야기하지 마.’ 막 이랬는데 거기 가지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잔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

‘인성이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동강댐 반대운동 등 많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보다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부들, 엄마들을 대상으로 탈핵 강의와 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특히 부산이나 울산 지역에서는 탈핵운동이 주된 흐름이 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는 이런 가능성을 좀 더 ‘조직화하고 정치적으로 엮어내면서 조직적인 힘을 가해서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에너지 전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전환 과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람은 ‘활동가’이다.

“활동가의 최고 강점은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고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이슈로써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여전히 활동가의 기능에 가장 중요하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혜정은 어촌마을의 딸로 태어나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삶이 바뀌었고 그 힘으로 생태 전환의 장기적인 과정에서 ‘활동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스스로 힘을 받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모든 활동가 특히 ‘여성’ 활동가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김혜정과 동년배인 박진섭(1964년 생)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5.18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내다가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성남에 가서 공장 생활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이후 전투적인 운동이 약화되는 시점에 ‘시대가 저물었으니 다른 걸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저항이라는 것은 물적 토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좀 더 시민적 마인드로 바뀐 거죠.”

그러다가 그는 1997년에는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 중앙환경운동연합으로 옮겨서 정책실장 등의 일을 하면서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 등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런 저런 갈등을 겪고 2006년에는 생태지평이라는 연구소를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서 활동했다. 그는 이후로 정책 기획 등에 관심을 갖고 정당이나 지자체 등과 관계하면서 활동하다가 2015년에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2016년에는 새로 생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큰 변화인데... 실용적 접근이라고 봐요. ...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기를 쥔 거죠.”

그는 생태지평에 있었다면 원전 폐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같은 것들을 주장만 했을 텐데,



‘태양의 도시 100만 가구’ 이런 것을 할 있다는 것은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무기를 쥐는 것, 조직이라는 것이 무기’라고 표현한다. 그는 시민사회가 자기변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하고 추진된 정책이라고 매우 높이 평가한다.

한 때 강력한 저항조직에서 일했던 박진섭은 환경운동가로 일하다가 이제는 지자체의 공기업 사장으로서 ‘조직이라는 무기’를 갖고 자신이 꿈꾸던 전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몸 담는 공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향점이나 가치는 유사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박진섭과 나이가 같은 서왕진(1964년 생)은 1986년 대학 3학년 때 시위에 나갔다가 동료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부상을 입을 정도로 열렬한 학생운동가였다. 졸업후 1989년에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물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 생활도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 학습, 토론을 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다가 그는 1993년 1월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당시 급진 민주주의론 같은 이론도 공부하면서 시민운동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때 1992년 6월의 리우 환경회의 같은 것들을 보면서 ‘환경문제를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이 생겼다고 말한다.

“세상 자체를 근본화해서 전환해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공부와 토론을 하면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창립에도 참여했고, 1999년에는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해서 환경정의를 창립했다. 약 10년간 활동을 하던 서왕진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00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2009년 말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박원순의 선거캠프에 정책단장으로 참여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정책특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등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꼼꼼함, 둘째는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서울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지도자가 자신의 지향을 얼마나 집요하고 꼼꼼하게 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어서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전환 과정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에서 엄청난 실천과 노력과 연구가 축적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굵직한 몇 가지 부문을 전환시키면 질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서왕진은 정치인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환의 역량을 시민사회, 즉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축적해야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3. 동물

환경운동가들 가운데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나 종 보전에는 관심이 많지만 개별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말 못하는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들의 고통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이 절에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그리고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 운동의 현장을 살펴본다.

조희경(1961년 생)은 1999년에 당시 김홍신 의원이 제기한 개고기 합법화 논란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좌담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동물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2000년에 동물학대방지연합 창립에 참여했다가 2001년에는 여기에서 독립해 동물자유연대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동물병원 지하에서 동물 생체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실험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개를 보면서 그녀는 송파대로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인생을 애네들을 위해서 쓴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 사건 이후 그녀는 2002년말 자신의 사업을 완전히 접고 동물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반려 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입법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그는 동물단체 입장에서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지만, 인간의 욕구 때문에 키우기 때문에 그들을 누군가가 ‘대변’해 줘야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런 운동 자체가 사실 인간중심의 관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애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저자 삽입)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기본적인 윤리라고 말한다.

“애(개-저자 삽입)가 어느날 (누군가가 - 저자 삽입) 때려서 눈이 하나 빠졌어요. 이걸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잖아요. 인간의 심성에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조희경은 동물권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동물복지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동물들한테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어진 수명이 닳은 40일, 기껏해야 40일, 돼지 6개월, 소는 2년 반에서 3년... 동물권만 외치는 순간에 애네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녀가 2001년에 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독립해서 동물자유연대를 새로 창립한 것은 동물 구조만으로는 동물에 대한 폭력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독립 후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나 법 개정 문제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려동물 중심으로 동물 운동을 하는 동물자유연대와 달리 해양야생동물 특히 고래 보호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황현진(1986년 생)은 2010년에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에 활동가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2011년 7월 경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보러 제주의 퍼시픽랜드로 갔다.

“불법 포획된 고래들이 평소에 지내는 굉장히 좁은 목욕탕 같은 수조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고래를 본 것도 처음인데, 그 고래가 멸종위기종인데, 정말 20-30년 된 시설에 갇혀 있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이 고래를 바다로 꼭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런 책



임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 그녀는 1인 시위를 계속 했고 결국 핫핑크돌핀스라는 작은 해양환경단체를 만들어서 고래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하다.

“감히 제가(웃음) 돌고래 후견인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같은 인간들이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에요.... ‘최대한 저와 같은 종들이 벌이는 만행을 좀 최소화시키자’ 라는 입장이예요.”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들에게 벌이는 만행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녀의 꿈은 사실은 매우 크고 거대하며 이루기 힘든 꿈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바다 생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고래에도 큰 관심이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 등과 힘을 합쳐 박원순 시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제돌이 등 여러 마리의 남방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큰 단체들이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후원금이나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조약골이라는 아나키스트와 함께 직함도 없이 해양동물들을 지키는 일을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조희경, 황현진 같은 동물운동가들에게는 동물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자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 그런 일을 매우 잘 하는 젊은 기자가 바로 남종영이다. 남종영(1975년 생)은 대학 졸업후 2001년 11월에 한겨레신문에 입사했다. 그는 여러 부서에서 일한 후, 2005년에는 한겨레21에서 본격적으로 환경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북극곰을 좋아해서 신혼여행 때 북극곰을 보러 캐나다 처칠에 가기도 했다. 거기서 기후변화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북극, 적도까지 가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재를 하기도 했다. 그런 심층취재의 결과로 『북극 곰은 견고 싶다』(2009, 한겨레출판)는 책을 출간했다. 고래를 매우 좋아해서 『고래의 노래』(2011, 궁리)라는 책도 썼고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갖고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2017, 한겨레출판)라는 책도 출간했다.

그는 스스로 동물운동가라로 생각하지 않지만 동물운동과 동물에 대한 기사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기자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 문제에 있어서는 좌, 우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동물 문제를 쓰는데 우파나 좌파 그런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명권 중심으로 쓰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기존의 어떤 진보 보수 관념으로 동물문제를 보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누가 더 인간중심주의적이나? 얼마나 더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했느냐? 가 우리의 기준인 거지 기존의 우파 좌파, 진보 보수는 중요한 잣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동물운동은 감정적인데 그 출발 지점이 동물의 고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동물운동이 성장하면서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하는 경로를 나아가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과 정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저를 바꾸는 에이전시(agency)는 동물원에서 고통 받는 동물의 얼굴, 혹은 개 농장에서 킁킁 거리는 개의 목소리, 그리고 구제역 때 살 처분되는 그런 것도 두어 번 봤거든요. 돼지 먹 따

는 소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남아있죠. 사실은 감정이, 감정이 결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동물운동이 빠르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그 힘으로 정책과 제도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개발지상주의 문화, 동물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문화를 바꾸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4. 어부와 농부

현대 산업사회에서 농촌이나 어촌에서 자연과 직접 교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연의 현장 속에서 몸으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절에서는 평범한 고향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다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반대운동의 기수가 된 박정섭, 농사가 좋아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사를 짓다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뛰어든 최요왕, 농사를 짓다가 정농회, 녹색평론, 풀무학교 전공부 등에서 일한 장길섭의 삶 이야기를 들어본다.

박정섭(1958년 생)은 서산 가로림만 근처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2006년에 도성리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가로림만이 막히면 그의 삶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몸으로 절감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다가 우리 거냐? ... 농민은 밭이 있어야, 어민은 바다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바다가 있다고 해서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가 바다를 해서 잡아다가 국민들 먹거리를 제공하는 보고창고다 말이야. 왜 이런 걸(조력발전소 건설을 - 저자 삽입) 하나?”

그는 거의 7-8년간 조력 발전소 반대운동에 삶을 걸었다. 생계가 어려워져 가족, 친척, 친지들과의 갈등도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계속될수록 바다와 자신이 떨어지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곤쟁이도 ... (이것을-저자 삽입) 잡던 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줬어... 수 천 년 수 억 년 동안에 다 살다 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고대로 물려준 거야. 이거보다 더 잘, 이거만큼 만들어줄 자산이 어디 있냐. 재산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 후손들에게 돈 물려주면 금방 없어지잖아.... 팔지 못하는 부동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야. 후손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못 팔아 먹잖아. 그런데 어떻게 돈 몇 푼 받고서 팔아 먹냐 이거야. 니 끼여?”

박정섭은 가로림만 바다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듯하다. 첫째, 바다는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것 즉 어촌마을 사람들 또는 어촌계의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공동자원’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함께 그는 바다를 모든 국민들이 누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로 함께 이해하고 있다. 지구시민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의 바다에 대한 생각은 ‘모두의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는 조력 발전소 반대운동에서 중요한 행위성을 발휘한 물범에 대해서도 물고기를 잡아 먹는 성가신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환경 전문가들이 생태적 희귀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물범이 있는 데가 천혜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거 같더라고. 말거리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 어디 가면 물범 얘기도 해야겠구나. 가서 물범 얘기하니까 먹혀들어.”

박정섭은 생계(subsistence)의 근거지로만 바다를 바라보다가 점차 미래세대, ‘국민’, 그리고 물범에까지 가로림만에 대한 이야기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이제 그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가로림만 전문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통과 보람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었다.

바다 뿐만 아니라 육지도 개발주의 앞에서는 풍전등화다. 4대강 사업은 국가가 어떻게 강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다. 최요왕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본성을 발견했다.

최요왕(1967년 생)은 대학 졸업후 폐수 처리 관련 회사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1995년에는 환경운동연합 안에 생긴 환경기술인 모임에 참여해서 공부도 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농사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농사짓는 것이 진짜 환경운동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중 인연이 닿아서 2005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유기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나게 재미있게 농사를 3년 정도 짓고 있었는데, 2009년에 4대강사업이 ‘터지면서’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농사를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때에 ‘4대강 사업이 터져 가지고 ... 폭 날아가버렸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결국 이 지역을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때까지 다른 세 가구 농부들과 함께 끝까지 정부와 투쟁했다. 그는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석한다.

“결국에는 일반 개인, 개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정치권력 내지는 자본이 다 뺏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는 동지 서규섭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서규섭은 ‘이 땅이 국가 것이면 그것은 국민 것이다. 정부 것이 아니고. 나도 국민이니까 내 것 일수도 있는 것이다. 왜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러느냐.’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국유지인 하천부지의 이용권을 임대 받은 농부가 모두의 필요를 위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를 국가의 이름으로 특히 4대강 사업이라는 자연파괴적인 사업을 이유로 탈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어릴 적 고향에서 바다가 매립되면서 민물장어를 못 잡게 된 아버지 이야기를 회고한다. 매립을 하게 되면서 자연에서 먹거리를 구하던 사람들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단절 될 수 밖에 없었다.

“저희 양식장도 있었고, 거기 꼬막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역주민한테서 싹 빼어가지고 자본한테 준 거예요.... ‘야, 힘 없는 이들이 여기서 만신창이가 되지’ 그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지요.”

그는 지금 양수리에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싸우던 동지들은 다 흩

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농사를 즐기는 사람은 최요왕 외에도 매우 많이 있다. 장길섭(1961년 생)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농촌 풍경을 담은 지리산 고원의 운봉을 원초적인 풍경으로 가슴에 담고 있다. 그는 사학과에서 대학 4년을 보냈지만 문학 서적을 읽으며 현대사를 스스로 공부했다. 그러다가 그는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의 책을 읽고 개안(開眼)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공장 노동자 생활도 해 봤으나 체력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출판사에 취직해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김종철을 만나 녹색평론을 창간하는 데 편집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녹색평론을 1호부터 9호까지 읽으면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잡지 등록하고, 9호까지 만들고, 그리고 농사지으러 가겠다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1호부터 9호까지 잡지를 만드는 동안에 ... 원고를 매호마다 한 30~40번 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을 암기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 우리가 지금 생태적으로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뭐가 문제고, 그리고 그런 거는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농적 순환사회로 가야된다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 제 인생이 바뀐 거는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 삶이 바뀐다.”

9호를 출간한 후 그는 1993년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풀무원 농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1995년 이후로는 정농회 사무국장도 하고 전국귀농운동본부를 창립하는 데에도 참여했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 새로 생긴 풀무원 교 전공부 교사가 되어 농업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젊은이들과 생태사상도 공부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즐겁게 살아갔다. 그는 농사를 당위로 시작했는데 농사를 30여년 짓게 되니까 농사가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고 즐겁고, 자신한테 딱 맞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이후 녹색당이 창당되면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저는 되게 편협한 사람이라서, 녹색당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하는데 동의 안하면 다 미워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웃음) 의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 탈핵을 해야 되는데 탈핵을 할 방법은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안된다.”

그는 녹색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 학교 이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면서 ‘정당활동을 하려면 학교를 나가라’고 요구했고 그는 결국 2017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는 지금 홍동면의 마을 이장을 하면서 농부들과 작은 마을을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기본소득 도입, 은행 제도 개혁 등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 기획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괴로워하고 있다.

“저는 희망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이 저를 바꾸지 못하게 제가 저항할 뿐인데.... 이 압도적인 도시 문명이 파국이 와가지고 붕괴되기 전에 사람들이 각성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폐허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세먼지만 며칠 돼도, 그냥 그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제가 동조하지



않는 거에, 동조하지 않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이웃들과 오순도순 살다가 죽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작은 마을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애쓰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바뀌지 않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5. 생명

우리 사회에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벌여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학생운동에서 시작해서 농민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을 평생에 걸쳐 벌여 온 정성현, 한 살림운동에 청년시절부터 참여했다가 지금은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형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생명운동, 협동운동의 현장을 경험했고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상무, 전무 등의 일을 한 김기섭의 삶을 살펴본다.

정성현(1945년 생)은 1964년에 고대에 들어가자마자 ‘한일협정 반대운동’ 시위에 참여해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이 시대를 회고하면서 이 때는 민주주의 문제는 기본이고 민족 문제가 주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가톨릭농민회(가농)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77년, 78년 경에는 농약(살충제)으로 인한 피해가 심할 때라서 가농은 효소 농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이후로도 가농은 정치투쟁에 머물지 않고 문명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니까 농촌사회의 민주화는 물론 공동체적 삶의 실현, 문명 전환을 지향하는 흐름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악의 해체와 문명 전환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생명운동이라고 본다. 그 흐름에 정농회, 한 살림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도 참여했고, 1998년에는 인제군에 평화생명동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평화운동과 생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냐 아니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음으로 질주하는 거대문명을 작은 문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 문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적정문명이란 중간 정류장을 통해서 작은 문명으로 가자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적정을 따져야 돼. ... 규모도 다 적정 규모를 따져야 되고.”

그는 ‘운동은 구상은 크게 하고 실천은 무진장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농,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등의 운동조직에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종교성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고등 종교와 새로운 정치 운동이 결합된 그런 형의 운동이 나와야 돼.”

고도의 종교성과 고도의 정치성이 결합된 새로운 운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는 이를 정치혁명이라고 말한다. 정성현은 운동가가 삶을 걸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의 운동론은 ‘문명전환’과 같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도 보통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

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중시한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나를 넘어서서 모두를 향한 심성을 키우는 고도의 종교성과 새로운 정치가 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생명운동은 장일순, 김지하, 최혜성 등의 원주 캠프와 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정성현은 특히 김지하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이들보다 한참 아래 후배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운동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다.

김기섭(1963년 생)은 강원도 원주에서 장일순과 함께 일하던 김영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원주에서 사람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이웃과 모두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간 그는 학생운동이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몰입하고 있을 때에도 원주의 생명 운동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공감하고 있었다. 졸업후 1986년에 그는 일본 고베 대학에 유기농업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귀국후에는 두레생협연합이 만들어질 때부터 오랫동안 이 조직에서 일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의미가 좁은 ‘우리’ 끼리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로 확장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거잖아요.그런데 ... 우리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쇠퇴해서 제도화되고 일종의 기능만 남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를 다시 살려야 돼요.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모여서 지역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우리의 폭을 넓힌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모두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에게 안 들어와 있는 모두가 생명이에요. 전체 생명인 거지.”

한 살림 선언의 ‘우주적 생명’과 유사하게 그는 ‘모두’로서의 생명론을 말하고 있다. 그는 한 살림이 ‘지역살림’을 선언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식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협동운동이 성공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는 원주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엮음의 운동이지 묶음의 운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주는 것만큼 그 사람도 줄 수 있는 상대만이 아니라 줘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사람과 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인 거죠.”

보답을 기대하고 주는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증여의 행위가 ‘모두를 지향하는 엮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의 전환이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김기섭의 생각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생각을 윤형근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윤형근(1963년 생)은 김기섭과 같은 대학 동기로서 서로 일찍부터 친하게 지냈다. 그는 대학 때 최루탄이 난무하는 교정에서 학생운동에 깊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회색분자’처럼 우울하게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다. 이 때 김기섭이 전해 준 원주의 생명운동과 관련된 글들을 보면서 한 살림에 빠져들게 되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뭘랄까, 무궁함 ...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 무궁한 자유성이랄까. ... 사실은 놀랍기도 하고 가슴 쿵닥쿵닥 뛰기도 하고.”



김지하와 원주의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쓴 글들은 학생운동권 선배들의 문건과 달리 그를 매혹시켰다. 그는 졸업 후 한 살림 모임 간사로 일하면서 장일순, 김지하, 최혜성, 김민기 등의 어깨 위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그는 약 10년간 대화문화 아카데미 간사로 일한 후 다시 한 살림으로 돌아와 활동했고 지금은 한 살림연합의 전무이사로 실무를 맡고 있다. 그는 한 살림 운동을 1인1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하는 일이라고 본다.

“한살림 왜 하나? 민주주의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 그저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입이 없는 것들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는 약자들,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본다. 그는 그 일을 한 살림이 지금까지 해왔고 특히 농부들이나 엄마들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살림 운동의 성공의 결과로 그것이 ‘사회화’되었고 이 때문에 한 살림은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는 협동운동은 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협동하는 존재로서 - 저자 삽입)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지. ‘너희들 경건해져야 된다, 자기성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김기섭의 ‘인식전환’과 윤형근의 ‘협동의 조건’은 동전의 양면일 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생명과 협동의 기반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생명이 자유로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6. 녹색정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고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탈핵을 하려면 녹색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녹색당 창당작업에 뛰어 들었다. 녹색당이 아니라도 생명과 자유를 살리기 위해 넓은 의미의 녹색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이 절에서는 ‘마을’에서 매일같이 혁명을 즐겼던 유창복, 녹색당 ‘당직자’로서 활동한 허승규, 시민운동을 하다가 녹색당을 창당한 하승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유창복(1961년 생)은 1980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며 수배 생활, 감옥 생활을 경험했다.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폐결핵에 걸려 3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해야 했다. 회복한 이후에는 사업을 하며 지내다가 1996년에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에 들어가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마을’에서 즐겁고도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20대에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는데, 방법론은 권력을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져와서 그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야 한다.... 그게 저의 혁명관이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살면서 매일매일이 혁명인데 권력, 권력을 만든 다음에 세상을 바

꾸는 게 아니라 난 매일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그 즐거움이 있는데. 난 오히려 권력을 바꾼 다음에 하는 혁명이 아니라 내 일상의 혁명이 훨씬 더 솔직하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가 학생시절 꿈꾸었던 혁명이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며 그의 혁명관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는 그의 혁명론이 해체되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재구성된 것이 행운이라고 말한다.

“2000년대의 해체주의의 거센 물살에 완전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마을이... 땅에서 걸러주듯이 (저를 - 저자 삽입) 걸러준 거예요.”

마을이 물에 빠진 그를 구해주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렇지만 옛 동지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좀 사는 것들이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동네에서 꼬물댄다고 세상이 바뀌어? 핵심은 구조인데.” 이런 비판들을 그는 ‘구조주의적인 세계관과 국가주의적인 혁명관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성미산에서 마을 축제를 열고, 성미산학교를 만들며 매일 혁명을 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그는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어찌다 공무원’이 되어 마을지원센터 센터장, 협치 자문관 등의 일을 맡아했다. 마을에서 자생적이고 자립적으로 만들어진 ‘혁명’이 서울시라는 거대한 정부기관과 만나면 새로운 정치와 정책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유창복은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행정 조직과 예산이 지원하여 서울시민이 사적 이해관심을 공적인 연결망으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마을에서의 혁명도 넓은 의미의 녹색정치이지만 녹색정치의 핵심은 녹색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녹색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2년에 창당되었다. 젊은 녹색당 당직자였던 허승규와 창립의 주역 하승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허승규(1989년 생)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학생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졸업후 2012년에 그는 녹색당을 만나게 되었다.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난데 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괜찮고, 흥미롭잖아요. 또 가보니까 그 강령이 저랑 좀 맞더라고요.” 그는 녹색당 행사를 줄줄 따라다니며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녹색당과 연애를 했다 싶은 정도로 녹색당 강연 행사에 많이 참여했다. 결국 그는 녹색당 당직자가 되어 녹색정치의 최전선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녹색정치를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쨌든 한국적 맥락에서 녹색은, 결국 그 성장지상주의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성장을 전제로 한 어떤 평등과 더 나은 사회가 아니라 성장 그 자체에 대해 다양한 가치들을 다 때려 박는, 한국적 맥락에서 성장지상주의와의 싸움인 거고,

좀 더 세계사적 맥락에서는, 그 성장에 대한 생태학적 한계, 지속가능성, 탈성장이 핵심인 것 같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왜 사회정의가 왜 나오느냐, 소셜 저스티스(social justice)가 녹색당 강령인데, 성장에 대한 비용부담이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그니까 결국 환경문제는 민생문제로 가거든요. 거기 그니까, 그럼 이 성장지상주의에 소외되는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주민, 젠더, 젠더불평등 심화시키는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고.”

결국 그에게 있어서 녹색은 탈성장 속에서 정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정치이다. 그런데 이 정



치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정치이기도 하다.

“녹색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성찰인거 같아요. 저에게는. 인간에 대한 성찰, 관계맺음에 대한 성찰, 젠더에 대한 성찰, 과로에 대한 성찰. 성찰이 결국 여유와 느낌으로 가는 건데, 성장은 성찰이랑 반대인거죠. 아, 물론 뭐 내적인 성장 이런 거 말고. 성장지상주의를 성찰하는 순간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그러니까 녹색이 되게 매력적인 거는 녹색은 모두에게 매력적이면서 모두에게 불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기도 ... 사실 불편함을 주거든요.”

모두에게 불편하지만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녹색정치라고 그는 말한다. 이런 정치는 사실 매우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가깝다. 그의 말에서 탈성장과 사회정의는 행복하게 만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것들은 균열을 일으키고 일쑤고 이것은 녹색당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다. 문제는 정치적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가치를 굳건히 세우면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녹색당 창당의 주역 하승수(1968년 생)는 녹색 정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는 6월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졸업후 회사 생활을 한 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 시절에 참여연대 법률 상담 지원활동도 했다. 2000년에는 참여연대 상근변호사로 일했는데 그는 그 해 일어났던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낙선, 낙천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2001년에는 시민자치정책센터를 만들어 자치를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제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활동을 하며 풀뿌리 정치를 위해 일하던 중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맞게 되었다. 그해 5월쯤 녹색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2012년 3월에 녹색당을 창당했다. 그는 ‘녹색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국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모이게 됐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녹색당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점이 좋았는데, 첫째는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문제를 심층적으로 알게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에 모여 자신의 열망을 주장하다보니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하승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절충을 이야기한다.

“현장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요. ...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조직내부 갈등도 그렇고 그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그렇고 갈등이 생겼을 때 ...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그냥 결국 절충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절충론자거든요 항상.”

그는 ‘사이다 발언이 많이 나오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루하더라도 상대방 예기를 들어가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나는 정치행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기후변화가 같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정치가 그런 일을 못한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그 길 가운데 핵심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가 정치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주창한 선거제도이다.

그는 그의 책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 공생·공유·공정사회를 위한 밑그림』(2019, 한티제)에서 탈성장, 탈지대, 탈화석연료·탈핵, 탈토건, 탈집중, 탈경쟁교육, 탈차별·혐오와 같은 7탈을 통해, 공생·공유·공정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7. 생태전환: 다층 복합의 장기 구조 전환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운동가들의 전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지금의 체제에 문제를 느끼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환경문제 해결, 민주주의, 동물의 권리와 복지, 자연과 함께 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녹색 정치 등 다양한 전환 담론들과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책,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해왔다. 동물운동가들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쏟아 붓고 있다. 어부와 농부들은 자연과 함께 자연에 부담을 덜 주면서 사는 삶을 꿈꾸었으나 국가와 자본이 그런 삶을 침탈하자 거리로 나서서 저항했다. 생명운동가들은 모든 생명, 모두를 위해 사람들의 변화를 설득해왔고, 협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삶의 정치는 물론 국가의 정치를 전환하는 데로 귀결된다. 녹색당의 정치, 마을의 정치는 크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수 많은 욕망이 모여서 갈등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장에서 생태 전환의 큰 흐름이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어렵다.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전환의 정치가 일상이다.

많은 운동가들은 청년기에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환을 꿈꾸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전환했다. 그들의 실천은 동료들과의 집합적 연대와 갈등 속에서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생명, 환경, 공동체, 동물, 녹색 등의 기표는 정치적 기의와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다. 전환의 방법론은 거버넌스, 대안정당, 풀뿌리 공동체와 대안 담론, 과학, 자급경제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본 다양한 사람들의 열망은 일치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며 만나지 못하고 미끄러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생태 전환’ 또는 ‘녹색 전환’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환의 꿈, 방법론 등을 종합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환운동가들은 생태민주, 생태평화, 생태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사회와 교류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생명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생태전환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태전환 또는 녹색 전환은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고 산업, 자본, 국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모두가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다층, 복합의 장기 전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생태나 녹색의 의미는 인간이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이며 산업문명, 자본주의, 국가가 역사적인 구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 생물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 전환은 우리가 앞에서 본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 전환은 다층, 복합의 장기 구조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생태 전환은 틈새, 레짐, 경관 등 다층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라는 작은 실험



삶의 전환: 생태 전환을 꿈꾸는 사람들

이 성미산 축제, 성미산 지키기 싸움, 성미산 학교, 마을 공동체 운동으로 진화했다. 마을 만들기 박원순 시정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기도 했다. 서울 제기동의 작은 쌀 가게 한 살림 농산은 60만 조합원과 2천여 생산자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둘째, 전환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작은 마을,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중앙정부에 이르는 여러 층위와 영역에서 생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전환 실험은 거대 지자체가 생태전환의 주도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런데 생태 전환은 하나의 그림을 하나의 꿈을 가진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동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전환을 꿈꾸고 있다. 전환은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열망이 모여서 서로 접합되고, 튕겨져 나가면서 커다란 흐름을 이루는 복합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순수 전환’은 없고 혼종의 ‘복합 전환’이 있을 뿐이다. 생태 중심적이면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산업, 자본, 국가를 넘어서는 ‘하나의’ 전환은 상상일 뿐이다. 사람들은 모순적이고 균열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전환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념형으로서의 생태전환을 꿈꾸면서 혼종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를 살아간다. 문제는 그 혼종이 강자와 강권을 정당화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환경, 생명, 동물, 마을, 자연이 모두 교차하면서 그 급진적 교차성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전환을 꿈꾸며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그 힘이 모여 생태전환, 녹색전환은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